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4. 12.

관계부처 합동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목 차

I.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개요	1
II. 농어업·농어촌 여건 전망과 기존 계획의 평가	5
1. 여건과 전망	7
2. 기존 계획의 평가	9
III.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및 비전·목표	11
IV. 부문별 추진 과제	15
1. 보건·복지	17
2. 교육여건	29
3. 정주생활기반	40
4. 경제활동·일자리	50
5. 문화·여가	63
6. 환경·경관	71
7. 안전	80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89
1.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91
2. 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역량 강화	93
VI. 계획의 실행과 관리	95
1. 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97
2. 투융자 계획	101

I.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개요

I.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개요

□ (목적)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 경제 침체 우려에 대응, 정주 여건 및 경제활동 여건을 종합 개선함으로써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

○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어촌다움과 편의성·안전성을 갖춘 정주공간 구현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 소득기회 다각화

□ (성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 법정계획

○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해 농어촌 공간 관점으로 통합 조정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종합계획

- 삶의 질 향상 정책 및 농어촌 지역개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부문별 과제
 -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농어업인 소득 및 사회안전망, 교육여건 개선
 -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발전역량 강화, 경제활동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
 - 문화·관광 육성, 환경·경관 보전, 농어업 작업상 재해안전 등
- 계획의 실행과 관리, 투자재원의 조달

○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계획으로 관계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평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지침 계획

○ 민·관 합동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18개 부·청이 협력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업계획

*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실무위 :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 (계획의 연혁) '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후, 「제1차('05~'09), 제2차('10~'14)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1차)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4대 부문* 133개 과제에 228조원 투융자(계획 20.3조원 대비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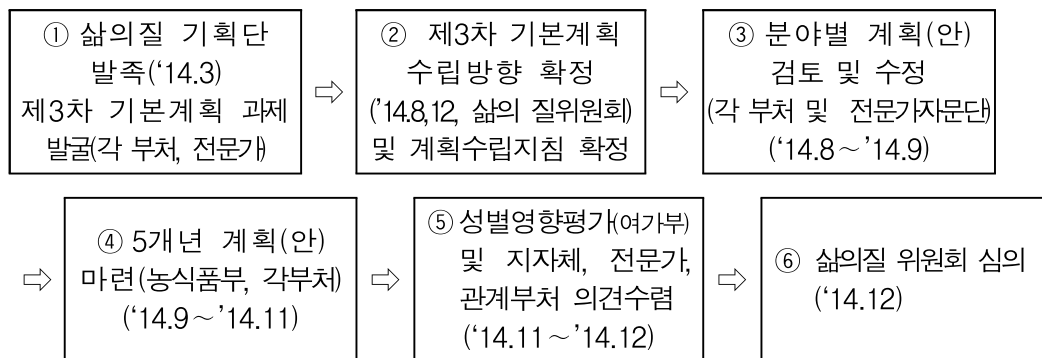
*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교육기반 확충,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활성화

- (제2차)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7대 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원 투융자(제1차 22.8조원 대비 151%)

*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4.6조원, 교육여건 2.4조원, 기초인프라 8.5조원, 경제활동 및 지역역량 2.9조원, 문화·여가 0.6조원, 환경·경관에 6.9조원 투융자

□ (제3차 계획 수립경과) 범부처 협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안을 마련하고 일반국민·지자체 의견을 수렴, 보완

- 범부처 참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획단,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자문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확정('14.8.12 삶의 질 위원회 심의)
- 각 분야별 세부과제 발굴 및 기본계획(안) 마련
- 농어촌 복지실태조사('13.9~10), 현장모니터링단 의견조사(9.3~23) 등을 실시하여 농어촌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 발굴에 주력
- 온라인 정책포럼(10.15~11.4), 지자체 워크숍(11.14~15),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11.21)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Ⅱ. 농어업·농어촌 여건 전망과 기존 계획의 평가

Ⅱ. 농어업 · 농어촌 여건 전망과 기존 계획의 평가

1 여건과 전망

- ◇ 농어촌 고령화, 도-농간 소득 격차 및 정주여건 격차 등으로 복지수요 증가, 귀농귀촌 확산으로 정책 수요 다변화
- ◇ 쌀 관세화 유예 종료, FTA 확산 등 시장개방, ICT · BT 등 첨단기술 접목, 6차산업화 등 새로운 도전과 기회 확대
- ◇ 자연친화적 삶, 휴식 · 치유의 공간으로 농어촌 가치인식 확산

□ **【인구규모 · 구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촌이 지속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도시에 비해 고령 · 독거노인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

- * 70세 이상 인구 비율: ('00) 8.9% → ('10) 14.8 → ('20P, KREI) 15.1
- * 독거노인가구 비중('10) : 농어촌 13.3% vs. 도시 4.5%

○ 최근 다문화가족, 귀농귀촌가구 증가 등으로 인구구조 다변화되면서 인구 감소세는 완화되고 향후 소폭 증가 기대

- * 귀농·귀촌 가구수 : ('01) 880 → ('11) 10,503 → ('12) 27,008 → ('13) 32,424
- * 농어촌 인구: ('00) 9.3백만명 → ('10) 8.8 → ('20P, KREI) 9.8

□ **【농수산물 시장개방】** 쌀 관세화 유예 종료, FTA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수출시장 접근 기회 확대

○ 한 · 중 FTA, 한 · 호주 FTA 등 체결로 국내시장 경쟁 심화

- * (한·중) '14.11.11 실질타결 선언, (한·호주) '14.4.8일 정식서명, (한·캐나다) '14.6.12일 가서명, (한·뉴질랜드) '14.11.20 타결

○ 한류 붐, FTA 특혜관세 등으로 수출 기회 증가

- * 한·미 FTA 발효 2년차 대미 농축산물수출(53억불)은 발효 전(4.4억불) 보다 21% 증가

□ **【농어가·농어촌 경제】** 농어가소득 정체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 규모화된 선도경영체 성장으로 농어가 내부에서도 양극화 진전

- * 농가소득(근로가구 대비) : ('00) 23백만원(80.5%) → ('10) 32(66.8) → ('13) 35(62.5)
- * 어가소득(근로가구 대비) : ('00) 19백만원(65.9%) → ('10) 36(74.2) → ('13) 39(69.8)
- * 농가비중(3ha이상 / 0.5ha미만) : ('00) 6.25% / 32.8% → ('12) 8.6 / 42.2

○ 자연탈농 등으로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농어가의 경제활동이 다각화 되면서 농외소득 증가

- * 농림어업 취업자수 : ('08) 1,569천명 → ('13) 1,426 → ('18p) 1,355 → ('23p) 1,296
- *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 : ('11) 43% → ('12) 43.8 → ('13) 45.5
- * 어가소득 중 어업외소득 비중 : ('11) 29.4% → ('12) 30.3 → ('13) 33.7

○ ICT·BT 활용, 친환경·고품질, 가공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新시장 창출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층 농업창업 관심도 증가

□ **【정주 여건】** 범부처의 지속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 적은 인구'라는 농어촌 특성상 의료·교육·문화 등 정주 인프라 미흡

○ 농어촌 내에서도 접근성에 따라 읍·면 소재지 등 중심지 발전과 함께, 오벽지 마을 과소화 심화

- * 가구수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 : ('05) 2,048개소 → ('10) 3,091

○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과 첨단기술 융복합 여건 성숙으로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기대

- *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 보급률 : ('11) 61.5% → ('13) 73.4

□ **【농어촌 가치】** 자연친화적 삶 추구, 건강·휴식·치유의 공간으로서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기대 상승과 가치 인식 확산

○ 농어촌 어메니티, 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

○ 농어업유산 등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원 발굴, 전승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해 주민 관심 증대

2 기존 계획의 평가

◇ 보건·복지, 교육, 기초인프라, 문화, 환경 등 종합적 접근으로 전반적 농어촌 삶의 질 여건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 상승(KREI) 및 귀농·귀촌 증가

* '12년 대비 '13년 지수 비교 : 보건·복지(+0.8), 지역사회(+0.7), 문화여가(+0.3), 환경(+0.4)

□ 농어촌 주민이 인식하는 삶의 질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인식 확산

* 농업인 농촌 생활 만족도 : ('07) 17.8% → ('10) 23.3% → ('13) 31.3%

* 귀농·귀촌 가구수 : ('01) 880 → ('11) 10,503 → ('12) 27,008 → ('13) 32,424

○ 고령·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등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성과 가시화

*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액 : ('04) 168천원 → ('07) 254천원 → ('12) 401천원

* 상수도(면지역) 보급률 : ('04) 35.2% → ('07) 45.3% → ('12)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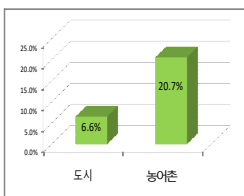
* 하수도(군지역) 보급률 : ('04) 32.0% → ('07) 45.7% → ('12) 62.1%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정책기틀이 마련·추진되고, 사회·경제자본 부족 등 농어촌 여건을 감안한 특화 정책*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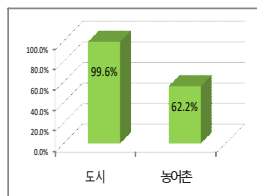
* 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육성(복지부, '12년 신규), 농어촌 거점 중학교 육성(교육부, '13년 신규) 등

○ 그럼에도 도농간 생활여건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 정책분야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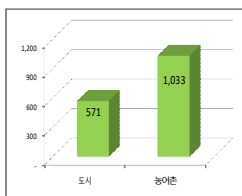
〈30년이상 주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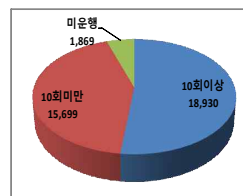
〈상수도 보급률〉



〈의료기관당 인구수〉



〈대중교통 운행현황〉



□ 분야별 성과와 과제

- (보건·복지)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지원('13년), 농지연금 도입('11년) 등 **생활안정 제도 강화**
 - 의료·복지·보육 인프라가 부족하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취약
 -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412개소로 전체 읍면의 29.2%('13년)
 - *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수는 5,145개소로 도시(54천여개)의 1/10 수준('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교육) 돌봄학교 및 방과후 활동, 교육비 지원 등 돌봄복지 확대
 - 농어촌 학교 과소규모화 추세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등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미흡
 - * 읍면·도서벽지 학교 현황('13) : 학생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 49.9%, 복식학급 운영 초등학교 수 595개교 (2,779개교 중 21.4%)
- (정주생활기반) 포괄보조제 도입('10년)으로 농어촌공간·인프라 개선 확대
 - 석면슬레이트, 노후주택의 분포가 농어촌에 집중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체감도 높은 기초인프라에 도-농간 격차 여전
 - * 상수도보급률('12) : 면 62.2%, 전국 95.1% * 도시가스보급률('12) : 면 10.2%, 전국 59.5%
- (경제활동·일자리) 6차산업화 본격 추진으로 경제활동 다각화
 - * 농촌체험마을(개소수) : ('09) 544 → ('13) 803, 농촌민박 : ('09) 16,681 → ('13) 24,122
 - 노인·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및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 (문화·여가) 「지역문화진흥법」('14.7) 제정·시행 등으로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지원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문화 접근성이 취약하고 지역자원 활용, 주민 참여 프로그램 부족
 - *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관람률 : 읍면 3.7회/52.7%, 대도시 5.1/72.5('12 문화향수실태조사)
- (환경·경관) 농업유산제 도입('12년) 등 경관관리 정책 확대
 - 축사·공장 난개발, 농어업 폐기물 처리 등 환경·경관에 대한 농어촌의 주민 인식 및 관리 부족

Ⅲ.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및 비전·목표

Ⅲ.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및 비전·목표

1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 ◇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 농어촌 맞춤형 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을 해소하고, 정주체계별 기능 강화 및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촉진
 -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기반 조성

< 새로운 삶의 질 정책 기조 >

구 분	과 거	미 래
이 념	도시 수준의 생활여건을 위한 도-농간 격차 완화	농어촌다움·농어촌 가치 중시, 주민체감 증진
정책 대상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지역 공동체,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정책 범위	복지, 교육, 의료 등 필수사회서비스 확충	안전, 환경 등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 략	농어촌 지원 확대 부문별 정책 강화	농어촌 맞춤형·특화 정책, 분야간 연계·통합 지원
사회서비스	HW 정비, 인프라 구축	SW 강화, 사각지대 해소
공간정비	권역·마을기반 조성, 유형별 차등 보조	중심지 기능 및 마을과의 연계 강화, 先역량 강화와 역량 단계별 지원
산업·일자리	도시 자본 및 투자 유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 순환, 1·2·3차 산업 연계
정책 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중앙정부 중심 지방정부 협력, 관(官)주도	지역·공동체 중심 거버넌스, 민간역할 및 중간지원조직 강화
정책평가 및 환류	하향식 ▶ 상향식	쌍방향 네트워크

2 비전 및 목표

비 전	<p>◇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p>														
부 문 별 목 표	<table> <tr> <td data-bbox="252 517 534 622">1. 보건·복지</td><td data-bbox="550 517 1197 622">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td></tr> <tr> <td data-bbox="252 645 534 750">2. 교육</td><td data-bbox="550 645 1197 750">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어촌 교육</td></tr> <tr> <td data-bbox="252 772 534 878">3. 정주생활기반</td><td data-bbox="550 772 1197 878">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td></tr> <tr> <td data-bbox="252 900 534 1005">4. 경제활동·일자리</td><td data-bbox="550 900 1197 1005">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td></tr> <tr> <td data-bbox="252 1028 534 1133">5. 문화·여가</td><td data-bbox="550 1028 1197 1133">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td></tr> <tr> <td data-bbox="252 1155 534 1261">6. 환경·경관</td><td data-bbox="550 1155 1197 1261">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td></tr> <tr> <td data-bbox="252 1283 534 1350">7. 안전</td><td data-bbox="550 1283 1197 1350">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농어촌 조성</td></tr> </table>	1. 보건·복지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2. 교육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어촌 교육	3. 정주생활기반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4.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6.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7. 안전	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농어촌 조성
1. 보건·복지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2. 교육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어촌 교육														
3. 정주생활기반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4.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6.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7. 안전	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농어촌 조성														
추 진 기 반	<p>▶ [중앙] 범부처 연계·통합 정책추진 강화</p> <p>▶ [광역·기초] 지역의 삶의 질 정책 실행력 강화</p> <p>▶ [현장]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p>														

IV. 부문별 추진 과제

IV. 부문별 추진 과제

1 보건·복지

목 표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주요 과제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 농어업인 사회 안전망 강화
- ▶농어업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개선
- ▶농업인 중층적 노후 안정 지원체계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역량 강화
-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사각 해소
-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 현대화
- ▶소외 보건서비스 강화

계층별 복지
서비스 강화

- ▶취약가구 자립 지원
-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 ▶여성친화 사회 조성 및 여성 역량 강화
- ▶다문화 사회통합 환경 조성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 강화
- ▶보건복지 연계 지원
- ▶거버넌스, 민간 조직 공조 강화

성과 지표

성 과 목 표	2014	2019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률(%) - 농지연금 가입자수 	63 3,957	70 9,000
■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기관 부재 郡지역(개) 	12	5
■ 계층별 복지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개소) 	580	630
■ 주민 체감 만족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13)48.9 (‘13)44.4	55.0 48.0

□ **농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 도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농어업종사자의 노후 대비 부족

- * 고령화율(농가/어가/전국, %) : ('01) 24.4/ 15.2/ 7.6 → ('12) 37.3/ 26.5/ 12.2
- * 소득격차(농가/전국) : ('10) 74%(32,121천원/43,581) → ('12) 64%(31,301천원/48,923)
- * 소득격차(어가/전국) : ('10) 82%(35,696천원/43,581) → ('12) 76%(37,381천원/48,923)
- * 빈곤율('11) : 농어업 종사 10.2%, 도시 4.6%

□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

- 농어촌 주민의 유병율이 높으나, 병·의원 등 의료 부분의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며, 보건·의료 서비스 도-농간 격차 여전

- * 유병율('11) : 농어촌 30.4%, 도시 22.8%
- * 지역별 의사 분포('12) : 농어촌 4.5%, 대도시 60.7%, 중소도시 34.8%
- * 평균 병·의원 수('11년 심평원 자료) : (군) 22개소, (시·구) 266개소
- * 정신건강증진센터('14) : 49개 군(59.8%), * 정신보건전문요원: 대도시 4.7명/센터당, 농어촌 0.23명('12년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현황조사 결과재분석, KREI)

-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

- *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수는 5,145개소로 도시(54천여개)의 1/10 수준('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 주민의 51.2%, 89.7%가 각각 읍·면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병·의원, 종합병원 이용

□ **농어촌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

- 노인독거가구·조손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중이 커서 복지 수요가 높은 상황

- * 단독가구/조손가구 비중('12) : 농어촌(33.8%/1.0%), 도시(23.4%/0.6%)

○ 농어촌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보육시설 등이 부족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13) : 412개소(전체 읍·면 1,412개의 29.2%)

○ 농어촌 국제결혼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아 다문화가족이 지속 증가 추세

- '14년 기준 다문화 가족은 80만 명 내외, '20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13년 결혼한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 : 26.1%('13, 통계청)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29.6만명, 배우자 29.6만명, 자녀 20만명('14.7월 현재)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미흡

○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 적은 인구, 자원 부족 등 농촌지역 특성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 공급 부족 및 접근성 취약

* 군(郡) 지역은 구(區)에 비해 평균면적은 13.6배 넓은 반면, 평균 인구수는 1/6 수준

○ 읍·면 지역 복지담당 공무원은 종합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약계층 발굴 및 관리, 사례관리 및 방문서비스 등 제공에 한계

* 복지담당 공무원 규모('13): 읍 평균 4.1명, 면 2.5명, 동 3.1명

○ 보건·복지인프라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 보완 및 민간의 역할 강화 필요

◆ 현장 모니터링단 의견조사 결과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21.1%, 이동·순회·방문진료 서비스 확충 19.3%, 농지연금 개선 15.5%, 응급 및 분만취약지 해소 13.0%, 국민연금 개선 13.0%

“응급환자에 대한 긴급대응시스템 확충이 절실하고, 보건소 장비 현대화 필요”

“면 단위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음”

“지역에 있던 산부인과가 없어져 멀리까지 가야하는 불편 해소 필요”

“1, 2차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저비용, 고복지 등이 될 수 있을 것임(예: 원격진료체제 도입, 마을별 주치의제도) 등”

나 추진 과제

1-1.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 농어업인 맞춤형 사회보장 확충과 사회보험 지원체계 강화로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1) 농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내실화

□ 국민연금 지원 확대, 두루누리사업 활성화로 노후 안전망 강화

○ 최저 생계비 등을 감안,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 인상

* 기준소득금액 : ('09) 73만원 → ('10) 79 → ('14) 85 → ('15) 91

○ 소규모 농어업 사업체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활성화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지원기준 : ('12) 125만원 미만 → ('13) 130 → ('14) 135 → ('15) 140

□ 소득 수준을 감안한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및 결손처분 확대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게 정률(28%) 지원 중인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15년~)

-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고소득 농어업인은 현행보다 지원을 인하

○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를 통해 농어업인 중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 300만원 이하인 자 → (개선안)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 450만원 이하인 자(보험료 재산요소 중 최저등급 구간 준용)

(2) 농어업인 대상 중층적 노후 지원체계 강화

□ 농지연금 등 농가 특성을 반영한 노후안정지원 강화

○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

- 가입자 부담경감 및 가입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 농지연금 가입자수 : ('14) 3,957명 → ('19) 9,000

○ 고령임업인이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개편 방안 검토

* 농지연금과 연계 관리 등 효과적 제도 운용 방안 검토

□ 경영이양직불제 제도개선으로 은퇴 후 생활 안정 지원

○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이양 대상 연령 확대(65~70세→65~74세) 추진

* 현재 고령농업인 요건 :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65~70세 이하인 농업인

(3) 취약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빈곤정책 대상 확대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15)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빈곤층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 소득·부양비 부과기준(부양의무자 4인, 수급자 1인 가구) : (현행) 290 / 212만원 → (개선) 464 / 404만원 ('15.하반기 시행)

□ 농어촌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 시 영농 특화사업을 내실화하고, 자활센터 생산물 유통체계 구축 등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1-2.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 현대화된 공공의료 체계 구축, 응급의료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백 해소

(1)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지원

-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능 보강 지원
 - 지방의료원(33개소)과 적십자병원(5개소)의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의료장비 개선, 직원 교육 등으로 공공의료 역할 강화
-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대학병원등의 우수 의사 파견시 인건비 50% 지원('15년 55명)

□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지원 및 이동·순회 진료를 위한 차량 지원
 - * 시설 개선율 : ('09) 51.6%(1,692개소) → ('14) 74%(2,425개소)
- 도서벽지 주민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 수리 지원
- 심·뇌혈관 예방, 치매 및 재활 서비스 등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2) 농어촌 의료인프라 확충 및 분만취약지 지원 확대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확보
 -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郡지역 : ('15) 10개소 → ('16) 9 → ('17) 7 → ('18) 6 → ('19) 5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전문의 등 의료인력 확충 및 24시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지원

○ 취약지역의 119 구급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이송체계 구축

- 구급차 공백 상황시에도 신속한 응급처치 및 구급활동이 가능한 펌블런스(소방펌프차 + 구급차) 차량 배치 확대
 - * 펌블런스 배치수 : ('15) 1,000 → ('16) 1,253 → ('17) 1,506 → ('18) 1,759 → ('19) 2,012
- 오·벽지 응급상황 발생시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체계 구축·운영, 중증응급환자 의사동승 구급헬기 출동, 나르미 병원선 운영 등

□ 분만 취약지 지원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17년 48개소)

- * 분만취약지 :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

(3) 공공보건 의료인력 개발 및 역량 강화

□ 공중보건 의사 인력의 농어촌 지역 우선 배치로 의료공백 최소화

- 의료 취약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 추진
-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확충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인력 직무교육 내실화

- 도서지역 등 벽오지 근무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의 응급처치 대응 등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농어촌 주민 건강·환경 이해 제고 및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상담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추진

(4)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확산

- 지역사회 인구구조·건강문제·주민수요를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로 농어촌 지역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액 : ('14) 997억원 → ('15) 1,006억원

- 방문건강관리, 한의학건강증진, 치매예방, 정신건강증진 등 농어촌 특성을 감안한 보건(지)소·진료소의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15), 우수사례집 발간 및 우수사례 확산('16)

□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예방 강화

- 농어업 관련 직업성 질환을 연구하는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농어업작업 유관질환의 원인 규명 및 예방교육 추진

- 근골격계 질환 등 주요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기반 구축 강화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개소 수 : ('15) 농업 8개소 / 어업 3개소

- 농작업 유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검토 추진

□ 농어촌 지역 맞춤형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신규) : ('15) 10개소 → ('16) 10 → ('17) 10 → ('18) 8

- 정신보건센터 신규 설치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

-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노인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강화

1-3. 대상그룹별 복지 서비스 강화

◇ 영세고령농, 아동·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족 등 대상별 복지 지원 내실화

(1) 취약농어가 자립생활 지원

□ 영농·영어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사고·질병 발생 농가, 고령·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작업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도우미 지원
 - * 암·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통원치료 농가까지 지원대상 확대 검토
- 고령·취약 가구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가사도우미 지원

(2)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 농어촌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대 및 보육여건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매년 10개소)하고,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이동식 놀이교실, 주말 돌봄방 등 농어촌형 보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 주말 돌봄방 설치(누계) : ('15) 15개소 → ('16) 20 → ('17) 25 → ('18) 30 → ('19) 35

□ 농어촌 지역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

- 방과 후, 주말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중·소규모 청소년 수련 시설 등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
 - * 설치율(시설수/시군구수) : ('15) 85% → ('16) 90 → ('17) 95 → ('18) 100 → ('19) 100
- 부처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로 농어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3) 여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및 여성 역량 강화

□ 여성 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 농어촌형 여성친화 마을 조성 등 농어촌지역 특성이 반영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 사업의 내실화 추진

*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업 홍보 등 지원

- 농어촌 등 소외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및 상담 서비스 확대

□ 농촌 여성 전문역량 제고 지원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창업 지원 확대

* 역량증진 교육 지원, 소규모·공동창업지원 및 6차 산업화 연계 현장중심 지원체계 운영 등

(4) 다문화 사회통합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강화

□ 다문화 가족 대상 맞춤형 지원 및 자녀 교육 지원

-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가족구성원간 소통 강화 및 자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추진

* 부모교육, 동화, 동요 등을 활용한 부모코칭 등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교구 지원

□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 초기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 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

1-4.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1) 읍·면 복지기능 강화

□ 읍·면사무소의 복지기능 강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 복지 서비스 제공

○ 넓은 면적, 복지대상자 분산, 복지자원 부족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실시('14~'15) 및 확산모델 제시('16)

* 찾아가는 상담 등 복지대상자 관리,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등

(2)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방문 진료시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의 통합사례관리, 공동방문, 정보공유 등 보건-복지 연계지원

○ 보건진료소의 예방적 건강증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사례 〉

- ▲ (전북 완주군 희망복지지원단) 본청 희망복지지원단 외에 2개 권역에 분소 운영 - 모니터 요원(지역 주민)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자원개발 추진
- ▲ (경기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방문보건팀, 복지자원팀, 보건복지프라자팀으로 행복돌봄과를 구성, 복지·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경남 거창군 행복나르미센터) 보건·복지 연계 모델(중앙 1, 이동 1, 권역 3개소)로 사회복지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가 한 팀으로 서비스 제공

(3) 민·관 협력, 주민조직의 역할 강화

□ 농·수협 자원을 활용한 재가복지서비스, 방과후학교 운영 등 지역 농·수협의 기존 복지사업 내실화 및 서비스 확대

○ 노인 돌봄, 보육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협 행복나눔센터 확충(~'17년 100개소)

* 사례 : 삼척 근덕농협은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 지역내 고령농업인에 대한 방문요양·목욕 등 재가서비스 제공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 의료·문화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확대

□ 농어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15: 30개소 → '17: 100)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강화

* 사례 : 전남 여민동락공동체는 모싯잎 송편 생산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복지서비스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사회적협동조합(기재부) 등

□ 마을 주민의 복지역량 강화

○ (복지이장제) 마을 이장을 활용, 복지대상자 발굴 및 생활실태 모니터링

○ (읍·면협의체) 이장, 부녀회장, 복지위원 등으로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 복지대상자 발굴·지원 및 특화사업 수행

* 충남 서천군 마산면 복지협의체 : 독거노인·장애인 가정 등 재래식 화장실 정화 사업, 버스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 진료보조 택시바우처 등 실시

□ 농어촌 마을단위의 생산적 복지 및 상호 돌봄문화 지원

○ 학습·사회활동, 경제활동, 건강관리, 환경정비 등을 종합 지원하여 고령주민의 독립적, 자활적 생활을 돕는 건강장수마을 육성

* 건강장수마을 : ('15) 163개소 → ('16) 226 → ('17) 263 → ('18) 231 → ('19) 115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목 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주요 과제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 ▶ 농어촌 초등학교
육성·지원
- ▶ 거점중학교 육성
및 ICT 기반 확
충
- ▶ 농어촌 학생
통학여건 개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 ▶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진로교육 강화
- ▶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농어촌 학생
교육복지 확대

- ▶ 취약계층 학생 지원
- ▶ 대학교육 기회 및
비용 지원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 ▶ 농어촌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 ▶ 학교 복합기능화
- ▶ 평생학습 활성화

성과 지표

성 과 목 표	2014	2019
■ 농어촌 공교육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거점중학교(개교) - 농어촌 학교 ICT 기기 보급률(%) 	50 48	('17) 80 ('17) 100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특성화 프로그램 	-	10
■ 농어촌 학생 교육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상담교사 배치율(%) 	('12) 17.4	95
■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 지원시설 수(개소) -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운영률(%) 	16 ('13) 21	25 40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학생 수 감소, 교육투자 감소 등으로 농어촌 학교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없는 면(面)지역 24개소('14년)에 달하고, 복식학급 운영 등으로 체계적 교육에 애로
 - * 읍면·도서벽지 학생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13): 49.9%
 - * 읍면·도서벽지 초등학교 중 복식학급 운영 학교 수('13): 595개교(2,779개교 중 21.4%)
 - 중학교 단계에서 크게 발생하는 도·농간 학력격차, 농어촌 중학교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으로 교육 이촌 현상 발생
 - * 농어촌 학부모 학교급별 만족도: 초등학교 3.48점 > 고등학교 3.22 > 중학교 2.76
 -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고, 통폐합에 따른 통학거리 증가로 인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약
 - * 시·도교육청 폐교(공립)현황: 수도권 209교, 기타광역시 82교, 기타지방 3,147교('11.4.1)
- 농어촌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지리적·경제적 불리함으로 인해 정보 습득과 간접체험 기회 등 제약
 - 복식·과소 학급이 많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이 부재하여 교사의 역량에 의해 교육의 질이 좌우됨
 - 도시에 비해 정보화 학습환경이 다소 저조
 - * 스마트기기 보유율: 농촌 66.5% < 도시 69.9% ('13. 교육부 스마트 교육 환경 조사)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등에 대비하여 ICT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 양질의 학습환경 구축 필요

□ 농어촌 지역은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과 빈곤 계층에서 성장하는 학생 수가 도시에 비해 많음

○ 다문화·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증가로 교육지원 필요성 증대

* 농어촌 다문화학생 수(명): ('11)14,391 → ('13)19,674 (전체 다문화학생 중 35.3%)

○ 농어촌 학교의 진로 교육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

* 진로상담교사 배치율('12) : (농어촌) 중학교 17.4%, 고등학교 81.2%, (대도시) 42.9%, 고등학교 92.8%

□ 농어촌 학교와 지역간의 연계 미흡

○ 지역의 평생교육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평생학습 참여 격차 발생

* 근거리 교육훈련기관 부재가 평생교육 장애요인으로 작용('13): 농어촌 23.9%, 대도시 9.5%

○ 농어촌의 학교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육·체육·문화 시설이지만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장 모니터링단 의견조사 결과 :

특성화학교 지원 확대 26.4%, 통학환경 개선 21.5%, 소규모학교 지원 16.0%, 농어촌학교 지원조직 활성화 11.1%

“학생 감소에 따른 통폐합을 거론할 게 아니라 소규모학교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농촌 특성상 학교와 집이 멀어 불편한데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통학에 어려움이 많음”

나 추진 과제

2-1.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 ICT 기반 확충 및 자율학교, 학교군, 거점중학교 육성 등을 통해 농어촌 특성이 반영된 공교육 서비스 제공

(1) 농어촌 여건 반영 초등학교 육성·지원

□ 농어촌 학교 교육과정·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 농어촌 초·중학교의 학력 증진, 특기·적성 계발, 맞춤형 돌봄 등 교육여건 개선 지원, 농어촌 ICT 기반 확충

* '15년: 지정형 전원학교 15개소에 4.5억원 지원

○ 농어촌 학교를 연계한 학교군(群)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면지역에 인접한 과소화된 농어촌 학교끼리(최대 통학거리 10Km) 교육 시설과 인적자원 등을 공유

* '15년~'16년: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 '17~'18년: 시범사업 → '19년: 평가 후 사업 확대

〈 학교군 사례 : 경기도 에듀벨트(Edu-Belt) 〉

● 도 교육청과 지자체는 인근 4개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제반 비용을 5년간 지원('09.9~)

* 경기 광주 중부면·남종면 일대의 광지원초, 남한산초, 번천초, 분원초

● 학교 간 교육과정 및 자원은 공유하면서 각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학기 초 한자리에 모여 각 학교의 교과 과정을 발표하고, 함께 할 교과 내용을 선택한 후 학사 일정 조정

* 교육과정 중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공동 연수·학생들의 현장학습 등 공동추진
예) 인라인스케이트는 광지원초, 도예교육은 분원초, 체육대회는 전체 학교 합동 실시.

(2)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 육성

□ 초등학교(전원학교), 고등학교(기숙형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덜한 농어촌 중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어촌지역 145개 시·군·구 중 80개 군에 면지역 거점별 우수 중
학교를 1군 1개교 육성·지원

* 연간 5억원씩 3년간, 80개 중학교에 총 1,200억원(특교)을 지원

(3) 농어촌 학교 ICT 기반 확충을 통해 스마트 러닝 활성화

□ ICT 콘텐츠를 활용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환경 제공

-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학교부터 우선 지원, 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로 단계적 확대

* (~'14) 2,000교 → ('15) 4,000교 → ('16) 3,700교 → ('17) 2,000교

- 스마트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등 ICT 인프라 확충, 스마트 멘토링*,
콘텐츠 개발·확보 및 활용 여건·능력 제고 지원

* 학생의 학습효과 제고, 정서적 안정 및 ICT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에 멘토 배치

(4) 농어촌 학생 통학여건 개선

□ 농어촌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

- 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예산 편성,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등
농어촌 지역 통학환경 개선 방안 마련(시·도교육청)

- 지역단위의 통학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 우수 모델 발굴·확산

* 통학여건 개선사업 우수 모델 발굴·분석('15~'16), 확산 지원('17~)

< 사례 : 전북교육청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

▶ 전북 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통학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통학거리 1km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및 통학택시 지원('09년~)

* '13년 기준 통학버스 331대 및 통학택시 37대 지원으로 통학시간이 40분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2-2.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 농어촌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진로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1) 농어촌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지원사업 관리 강화

- 소규모학급, 복식학급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농식품부 협업)
- 농어촌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어촌 여건을 감안한 교육발전 방안 연구 및 개선사업 추진 지원 체계화

* '14년부터 농어촌교육지원센터 운영 중(서울대교육지원센터, ~'16.6)

(2) 농어촌 학생 진로교육 강화

□ 직업체험 기회가 적은 농어촌 학생을 위해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대 배치('19년 95%)
 - * 도서벽지·소규모학교 등에는 순회교사 형태로 운영
- '18년까지 농어촌 전체 중·고교에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확산
 - 진로체험, 심리검사, 상담·멘토링 지원 추진, 진로교육 교과 운영
 - *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 내 협력학교(10~20개교)를 연계하여 진로교육 실시
- 원격화상 시스템으로 전문직업인 멘토를 매칭하여 직업 체험지원
 - * ('13) 57교 → ('14) 408교 → ('15) 900교 → ('16) 1,400교 → ('17) 2,000교

(3)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장 공모 확대

- 농어촌 학교에 적합한 인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공모학교를 우선 지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모니터링·관리 강화

☐ 농어촌 학교 교원 배치 내실화

- 학생 밀도 및 읍면지역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한 교원 배치를 통해 농어촌 학교 배려

☐ 농어촌 신규 교원 육성

-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시 일정기간(5년) 이상 도서벽지, 면단위 농어촌지역 근무조건으로 별도 구분 채용 확대

2-3. 농어촌 학생 복지 확대

◇ 취약계층 학생 지원 다각화, 대학 진학기회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복지 확대

(1) 취약계층 학생 지원

□ 농어촌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강화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학습, 문화체험, 정서 프로그램 등을 집중지원

* '14년 기준 1,836개 사업학교 중 읍·면지역 학교는 182개교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 농어촌지역 학교 여건을 고려한 예비학교와 중점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학생의 언어·문화이해교육 및 학교적응을 지원

* (예비학교) 다문화학생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집중 이수 지원('14:79개→'17:140개)

* (중점학교) 다문화학생과 상호간 이해 제고 및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모든 재학생에 다문화이해, 반편견·반차별 교육 실시

(2) 대학 진학기회 확대 및 학자금 지원

□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 내실화 및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 농어촌 거주기간* 요건, 대상지역 설정 등 농어촌 특별전형 내실화

* 2016학년도부터 농어촌 거주기간 6년 적용(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 지방대학 평가시 가점,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소재 고교 졸업자에 대한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

* 지역균형 선발인원: ('15) 18천명 → ('16년 이후) 20천명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소득계층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기준 적용, 대출금 상환율 제고 및 장기연체 관리 등 상환·관리 강화

* 소득기준 적용 및 연체이자 도입을 위해 관련 지침·규정 개정 및 업무시스템 정비('15)

□ 농어촌 대학생 및 고교생 장학금 지원을 통해 농어촌 사회 인재양성 및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 (자녀 장학생) 저소득층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혜 규모 확대 및 선발기준 개선(농촌거주 요건 신설, 소득기준 강화 등)
- (후계인력 장학생) 계속장학생 자격유지 심사 강화, 진로계획 평가·관리 내실화 등 우수 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농촌 인력 확보와의 연계 강화
- (고교 장학생) 농식품·생명 계열 고교 재학생 및 농어촌지역 학교 문화·체육 분야 우수학생 지원

2-4.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 강화

◇ 농어촌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학교 기능 복합화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1) 농어촌 지역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 지방 교육행정협의회 등 지역 행정협력 강화

- 지방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협력을 유도하고 농어촌 교육 활성화 논의 촉진(농식품부-교육부 협업)

< 사례 : 제주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

- 제주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육성, 읍·면 지역 고등학교 육성,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등 안건 상정·협의

□ 농어촌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교육공동체 발굴·지원

- 면단위 이하에서 2개 이상의 교육주체(학교, 마을, 기관, 단체 등)가 협업하는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한 학습지원, 진로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교육 등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 매년 20개소,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며 농촌 학교를 다니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14년 16개소)
 - * 농촌유학의 정의 및 지원근거 법제화, 시설 및 교사채용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청 평가 개선

-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시 농어촌 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지자체와의 협력 정도 등 평가지표 발굴, 개선, 관리
 - * 예시) '농어촌 학교 수 비율 대비 농어촌 학교 교부예산 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

(2) 학교 복합기능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복합 공간화

- 학생의 방과후 활동, 주민의 평생교육 등을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공동 협력하고, 주민 교육·편의 공간으로 학교를 복합기능화
 - * 포괄보조사업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는 학교시설 복합공간화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 * 생활권 단위 공공시설을 학생 돌봄·교육 및 주민 평생교육시설로 공동 활용

〈 사례 : 완주 이성초등학교 〉

- 지역주민, 동창회,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생과 주민 대상 문화·건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폐교 위기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학생 수: ('07) 25명 → ('13) 143명)

□ 생활권 단위 농어촌 평생교육 활성화

-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확대
 - * 행복학습센터 운영 시·군·구: ('14) 60개 → ('15) 92개
 - * 행복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근거 마련(평생교육법 개정, '13.12)으로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
- 읍·면단위 이하 마을주민 중 평생교육지도자를 육성, 지역 평생교육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전문성 보강

〈 사례 : 이천시·진안군 사례 〉

-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별로 전문인력 배치로 주민의 자치기능 및 평생교육기회 제공, 교육 불균형 해소, 교육 환경 확충·개선
- (진안군)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주민중에 한명을 양성하여 센터별로 평생학습지도자를 배치

3 정주생활기반

목 표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주요 과제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 ▶ 농어촌 생활권 정주
기반 강화
- ▶ 수요 대응형 교통
서비스 지원 확대
- ▶ 주민체감형 협력
사업 발굴 지원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 ▶ 주민 주도 지역개발
방식 확산
- ▶ 상향식 지역개발
지원체계 구축
- ▶ 농촌 마을의 유형별·
역량단계별 지원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 기초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 ▶ 농어촌의 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 ▶ 고령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 ▶ 취약계층의 우선적
주거환경 개선

성과 지표

성 과 목 표	2014	2019
■ 정주공간 활성화 - 농어촌생활권 중심지 육성(누계, 개소)	297	650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 도농복합시·군 하수도 보급률(%) -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71 78 81	82 85 90
■ 주거여건 개선 -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 농촌 주택개량 융자지원(누계, 만동) - 슬레이트주택 철거(누계, 천동) - 빈집(폐가) 정비(누계, 천동)	88.3 1 50 121	90 6 187 161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개발 지원 및 마을권역(453개)·읍면(297개)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 * 포괄보조금제도 : 부처별 사업간 중복 문제 및 지역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10)
- * 일반농산어촌개발(지특) : '10년~'14년까지 국고보조 4조 6,258억원 투입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14.9)으로 마을을 계획적·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생활 여건 격차 상존

○ 농어촌 마을에 노후주택, 빈집이 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

- * 농어촌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 20.7%(전국 노후주택의 47.1%가 농어촌 소재)

○ 도농간 상수도 보급률 격차 및 에너지 사용 불균형 심화

- * 상수도보급률('12년) : 도시 95.1% 농촌 62.2%
- * LPG 가격은 도입 원료비, 유통구조 등으로 도시가스의 2배 수준

○ 대중교통이 취약한 마을이 분포하여 고령층의 이동 불편 가중

- * 전국 행정리 중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이 3,400개소(9%)

□ 노인독거가구 등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도 지속 증가

○ 주거·영양·위생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사회와의 관계 단절 및 질병 등으로 우울증, 자살, 고독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

- * 70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10) : 농어촌 39.2%, 도시 13.6%
- * 농어촌지역 65세 이상 독거가구 : ('00) 28만 가구(9.2%) → ('10) 44(13.3)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은 낮은 소득수준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자발적 주거여건 개선이 어려움

* 저소득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비율('12) : 농가 44.4, 도시 17.1

□ 지자체 자율성 및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향식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현장의 역량 수준이 미흡

○ 광역단위 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13), 현장포럼 ·
총괄계획가 도입('12)으로 지역 주도의 개발 여건 조성

* 총괄계획가: 주민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로 계획수립 지원

○ 시·군 단위의 중간 지원조직 역량 부족 및 현장 지원체계 미비
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 추진에 어려움

◆ 현장 모니터링단 의견조사 결과 :

도시가스 보급 31.3%, 상하수도 확충 및 개선 19.2%, 농어촌교통서비스
개선 15.2%, 마을공동생활홈 지원 15.2%

“농촌지역은 대개 간이상수도인데 수질오염이 많음”, “농어촌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이 부족함. 특히 마을길이 소로여서 통행에 불편하고 노후주택 등이 다수 분포함”,
“마을회관을 원룸형태로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고려
할 필요가 있음. 공동생활홈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

나 추진 과제

3-1.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 중심지와 마을간 연계 발전을 통해 살기 좋은 생활권 구현

(1) 생활권 정주기반 강화

□ 농어촌 중심지(읍·면소재지)를 배후마을에 대한 복지·교육·문화, 농어촌 관광·경제 활동 거점으로 육성

○ 중심성, 발전 잠재력과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큰 읍·면소재지를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로 선정·지원

- 배후마을에 대한 생활서비스 공급, 경제활동 다각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시설 등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지원(지구당 80억 원)

* 농어촌중심지 선도지구 선정(누계) : ('15) 15개소 → ('16) 30 → ('17) 50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계획적·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 건설

○ 마을 단위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구축, 경관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조사업 : ('15) 30개소 → ('16) 35 → ('17) 40

○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연간 1만동, 5천억원)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촉진

(2)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수요 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교통 서비스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배후마을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취약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운행 지원('15년 : 18개소)
 -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서는 주민회, 조합 등 마을 공동체가 운행계획 수립·운영 주체가 되어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제공
 - * 교통모델 발굴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 정립 및 우수사례 확산
 -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표준모델 보급('15년)
-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여객선 대체 건조
 - 도서민의 여객운임 부담 완화를 위해 연안 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속지원(20% 정률 지원)
 - 낙도보조항로에 운항 중인 노후 여객선을 대체 건조

(3) 주민 체감형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원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 주민의 실생활권을 토대로 구성된 권역에 기초인프라, 복지 등 주민 체감형 사업 공동 추진('15: 650억원)
 -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생활안전 부문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창의적 사업지원 강화
 - *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 체계 도입으로 실질적인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

3-2.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 주민주도의 상향식·역량수준별 지역 개발로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민 유치 및 재능기부를 통해 공동체 활력 창출

(1) 주민 주도 지역개발 방식 확산

□ 주민 주도의 지역 및 마을 만들기 지원

○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방식을 확산하고, 밀착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군 단위의 자체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프로그램 확대 : ('14) 350마을→('16이후) 450

*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 목표 : ('16) 10개소 → ('17) 20 → ('19) 30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군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공무원·마을리더 현장교육 확대 등 역할 강화

* 공무원(누계) : ('15)180명→('17)540→('19)900 / 리더(누계) : ('15)270명→('17)810→('19)1,350

○ 농어촌 개발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 및 전문가 육성

* 지역개발전문가(컨설턴트,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등) 발굴·육성 : 매년 40명 내외

□ 깨끗한 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콘테스트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단위 소규모 사업 추진

※ 해외의 농어촌마을 콘테스트(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 독일은 '61년부터 경쟁을 통한 우수마을 만들기를 위해 '우리 마을에 미래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농어촌마을 콘테스트 실시

독 일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 마을에 미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단정안 마을-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지원

- 역량단계(예비-진입-발전-자립)에 따라 마을개발 사업 지원 체계화
 - * (예비) 역량강화 → (진입) 기반구축 → (발전) 종합개발 → (자립) 활성화
- 농어촌 마을(행정리 기준) 유형별·발3전 단계별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현황 진단 및 정책 연계 방안 마련
 - * (1차) 마을진단지표(안) 개발 / (2차) 샘플조사 및 지표 보완 및 최종 개발

(2) 도시민 유치·정착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력 증진

□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계별 맞춤지원 강화

- (관심·준비단계) 귀농어귀촌종합센터, 박람회 등으로 정보·상담서비스 제공
 - 전문가풀(1,200여명), 귀농설계사를 활용한 상담으로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층 창업, 대학교 특별 과정 등 귀농귀촌 교육 확대
 - * ('14) 2,350명, 44개과정 → ('15) 3,000명, 50개과정
 - * 귀농어·귀촌 지원 법령 제정('15)으로 관련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실행·정착단계) '귀농인의 집'(3년간 100개소), 체류형창업센터(8개소), 농어촌형 임대주택 조성(1~2지구 30~60호) 등 주거·창업 지원
 - 창업자금 지원조건 개선(금리 3%→2, 한도 2억원→3), 예비 귀농인 농신보 이용 확대,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 등 규제 발굴·개선
 - 농어촌주택소유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속 지원

□ 도시민의 재능나눔 활성화로 공동체 활력 증진

-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도시민의 농어촌 재능나눔 활동을 매칭·지원하고 재능나눔운동본부를 통해 범국민 캠페인 전개
 - * 재능나눔 기업·단체·대학교 지원: ('14) 63개소 → ('15) 80 → ('19) 100
-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능나눔 확산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 지자체 재능나눔 지원 네트워크: ('14) 15개소 → ('15) 25 → ('19) 100

3-3.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상·하수도, 도로, 소형LPG 저장소 등 주민 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1) 기초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 지속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체계 구축·운영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 ('15) 73% → ('17) 80 → ('19) 82

* 취·정수장, 배수지, 관로 등 305개소 설치('15~'19년 12,779억원 국비 지원)

○ 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수 공급 대책 마련

* 농어촌 지하수 취약지역 수질 현황 파악 및 결과 분석('18년까지)

* 마을 공용관정 개발사업을 통한 농어촌 먹는물 대책 마련('19년까지)

□ 하수도 보급률 확충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 신설 집중 지원

○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면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00개소 신규 설치

* 하수도 보급률 제고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신규 사업 우선 지원

* 도농복합시·군지역 하수도보급률 : ('13) 77.6% → ('19) 85%

□ 기초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계획적 정비 지원

○ 임시 방편적 인프라 지원에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지원 체계로 전환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 시·군 농발계획에 반영된 사업 우선 지원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프라 취약 지역 선정 및 주민 수요에 적합한 시설 조성 지속 확대

* 마을기반정비, 빈집 정비, 편의시설(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및 환경보전시설 설치 등(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포함)

□ 어항 유희공간 실태조사와 활용 모델 발굴

- 어항의 유희공간 실태를 조사하여 DB화하고, 지자체 등 수요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 어항 유희공간 재생사업 : ('16) 5 → ('17) 10 → ('18) 20 → ('19) 30

(2)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충 시 농어촌에 우선 지원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농촌 주민 연료비 절감

- 도시가스사에서 투자효율이 낮아 배관투자가 곤란한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구축시 정부 융자지원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시공 지원

* LPG 용기공급 대비 20~30% 공급가격 인하, 안전성과 편리성 대폭 향상

*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개소) : ('15) 35 → ('16) 22 → ('17) 22 → ('18) 22

(3) 농어촌의 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용

□ 도-농간 ICT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광대역통합망 구축 지원

- '17년까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공동으로 전국 50세대 미만 행정리 (13,217개)에 100MB급 인터넷이 제공되는 광대역통합망 구축

* 광대역 통합망 구축 마을수 : ('14, 누계) 8,750 → ('15) 1,497 → ('16) 1,584 → ('17) 1,386

□ 농어촌의 경제활동(생산, 유통 등)과 생활 여건(의료, 교육, 문화 등)*을 ICT로 개선하는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15년)

* '15년 기획 연구를 거쳐 관계부처(미래부, 산업부, 교육부, 복지부 등) 협업 추진

- 농어촌 마을 유형별로 ICT 기반 '행복한 농촌 모델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모델별 현장실증('16년~)

3-4.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 고령자 맞춤형 공동시설 지원 및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향상

(1) 고령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

- 고령자맞춤형 공동시설(공동생활홈, 급식시설, 목욕탕 등) 조성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등 기본적 생활여건 개선 도모
 - 마을회관 등 기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시설로 활용
 - * 시설 조성 시 고령자를 감안한 입지선정(마을 중심지) 및 설계(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를 적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시범사업 추진('14~'15) 후 사업 모델을 구축('15.12)하여 전국적 확산 유도

(2) 취약계층 우선의 주거환경 개선

- 농촌지역 고령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 화장실, 지붕개량, 도배 및 장판교체, 보일러 시공 등 주택상황에 따라 시급한 부분 개보수 추진
 - * 매년 450가구 내외, 가구당 3백만원 이내
-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 주택(19만동)을 '21년까지 철거
 -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 ('15) 22만동 → ('16) 25 → ('17) 3 → ('18) → 3 → ('19) 3
 - * 가구당 국고 지원 144만원, 지방비 포함 최대 288만원 철거비 지원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주택개량 지원
 -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경·중·대보수 지원(최대 950만원)

4 경제활동·일자리

목 표

농어업·농어촌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주요 과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창업촉진 및 역량 강화	농어촌관광 체계화·품질제고	농어촌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 농수산물 가공 및 新유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주체별 맞춤형 지원 ▶ 6차산업 사업화 및 활성화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관광 추진체계 정비 ▶ 농어촌관광 품질 제고, 역량 강화 ▶ 농어촌관광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손 부족 해소 ▶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여건 개선 ▶ 공동체사업 활성화

성과 지표

성 과 목 표	2014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산업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소득 대비 농외소득률(%) - 농가 다각화율(%)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수(개) 	31 12 (예비인증)379	36 2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관광 중 농촌 관광 비중(%) 	4.5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누적, 건) - 마을단위 공동경영체(개) 	13,000 (‘12)2,600	100,000 4,500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소득 정책이 지속되면서 농어업·농어촌의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농가소득원 확충이 대안으로 부각

- * 중소농(269천 가구) : 농가소득 27,992천원, 가계지출 27,412천원
- * 지난 10년간 농업소득 평균 증가율('03~'13) : - 0.52%
- * 도시근로자 대비 농어가소득 비중(농가/어가) : ('10) 66.8/74.2 → ('13) 62.5/69.8

- 그간의 정책 지원으로 제조·가공, 유통, 관광 등 6차산업화를 위한 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정책간 연계 및 주체 역량 부족

- * '67년부터 농가 부업단지 육성, 새마을 공장 건설, 농공단지 및 특산단지 조성, 향토산업 및 신활력사업 등 추진

- 지역별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효과적인 정책연계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 성공모델은 제한적

- * 성주(참외 산업), 고창(복분자 산업), 문경(오미자산업) 등

- 농어가에 대한 1회성 지원사업 보다는 단계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견실한 6차산업화 주체로 육성하는 정책 마련 필요

< 6차산업화의 개념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농특산물생산 기타 유·무형 자원	× 융복합	식품, 특공산품 제조·가공	× 융복합	유통·판매, 체험·관광·축제 등

* 예시 : 음성 (주)젊은 농부들

- (1차) : 도시의 20대 대학 졸업반 청년들이 귀농('10)하여 **블루베리 재배**
- (2차) : 블루베리를 가공하여 **비누, 효소, 잼** 등 생산
- (3차) : 팜핑(Farm+Camping) **체험 및 교육농장, 전자상거래(보라마켓)** 운영

-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 업체는 증가하였으나, 제품 차별화 부족, 시설·입지규제,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에 애로

- 안정적인 유통·판로망을 통한 소비자와의 접촉기회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소 필요

□ 농촌관광 참여 주체, 인프라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역량부족, 단조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농촌관광 확대에 제약

○ 낮은 경쟁력·농촌관광 공급자간 경쟁 심화로 부가가치 증대에 한계

* 농촌관광 재방문의향 : ('09) 61.9% → ('11) 70.4 → ('14) 65.3

* 농촌 민박 수 : ('06) 11,659 → ('09) 16,681 → ('13) 24,122

○ 새롭게 각광받는 관광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상품 개발 필요

* 산림휴양, 아웃도어 활동, 음식체험, 말산업 등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 대두

□ 농어촌 고령화 심화 등으로 농업노동력의 부족 문제 심화

* 경영주 60세이상/49세이하 : ('95) 42.3%/27.9% → ('10) 60.9/14.7 → ('13) 67.3/9.3

○ 도시의 유희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농 노동시장간 연계, 정보제공 확대 등 정책 대안 필요

* '12년 시(76개) 고용률 57.2% 실업률 1.5% / 군(81개) 고용률 63.0% 실업률 0.7%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및 이탈 문제가 빈발하여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

* 농업 노동의 계절적 특성을 완화하고자 '09년 농업 분야에 '근무처 추가 제도'를 도입했으나 활용이 저조('13년 76개 사업장)

○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고령농 및 여성농 등 주민 특성별로 적합한 일자리 제공 필요성 증대

* 귀농·귀촌 가구 수 : ('01) 880호 → ('11) 10,503 → ('13) 32,424

◆ 현장 모니터링단 의견조사 결과 :

농어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지원 30.3%,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3.0%, 6차산업 생산기반 지원(종합가공지원센터 등) 15.2%

“농촌일이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외국인 인력이 많이 지원되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 쉽지 않음”,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관련 교육 및 인력 지원 필요”, “농촌관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나 관광 품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개발이 필요함”

나 추진 과제

4-1.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 지역 여건에 맞는 6차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농가 가공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1)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 기반 마련

□ 6차산업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 제고를 통해 6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5년단위) 및 지역별 시행계획(매년)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 내용 : 6차산업화 실태(참여농가, 규모, 품목 등), 추진기관간 역할분담 및 세부 지원정책간 연계, 성과관리방안, 소요 예산 등

○ 지역별 6차산업화 추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원 센터(9개소)지정 및 역내 지원기관간 협의체 구성

- 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 등에 대한 6차산업화 교육·컨설팅 추진

○ 6차산업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매년)를 통해 통계기반 구축

○ 지자체 포괄보조사업(농촌복합자원화사업 등)의 사업추진체계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사업 기획·평가·모니터링·성과관리의 단계별 지원 등

□ 6차산업화 시범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수익모델 시범사업 실시

○ 생산·가공·유통·외식·체험 등 중심사업별 모델을 정립하고 사업성과를 확산하는 수익모델 시범사업 실시

*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 : ('14) 30억원 → ('15) 60

* 어촌지역 시범사업 : ('15) 5개소 → ('16) 사업성과에 따라 어촌특화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 검토

□ 6차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 지속 발굴·개선

○ 농업인 제조·가공 활동에 대해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 지자체의 제정 확산 유도('14:25개소→'15:50)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할 신규 규제특례 발굴 및 법제화 추진

*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특허법) 등 57개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 적용

(2)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 농식품 관련 특화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육성

○ 규제특례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연관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6차산업지구(누계) : ('14) 3개소(순창, 하동, 영동) → ('15) 9

□ 지역 농산업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특화산업 육성 지원

○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략식품 사업 및 향토산업육성 사업 추진 내실화

-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화

○ 6차산업 주체간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운영 지원('14:10개소→'15:20)

○ 지역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 권역별 수산식품거점단지 신규 조성 : ('15) 1개소 → ('16~'19) 매년 2개소

○ 지역자원에 기반한 특화농공단지 육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고창 복분자, 금산 인삼약초, 괴산 발표식품 특화농공단지 등 '14년 22개소 조성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실화 및 성과관리 체계화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계사업 확대 발굴 및 기 지정 특구에 대한 관리 내실화

* 지역특화발전특구 160개소 중 농업·농촌자원 활용형 83개소('14.3월기준)

(3) 농수산물 가공 및 新유통 활성화

□ 제조·가공 시설 현대화, 제품 개발 등 가공산업 육성

- 식품제조·가공 시설 현대화 및 원료매입 등 운영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식품 포장 디자인 등 컨설팅 지원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고부가 식품 R&D 지원 확대

-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수산 간편식품 발굴 및 상품화 지원

* 간편식품 발굴 → 포장 및 가공기술 개발 지원 → 상용화를 위한 편딩 지원 ('15, 4억원)

- 고품질 수산물 공급을 위해 산지의 수산가공품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 가공시설 현대화: ('15) 84개소 → ('17) 90

□ 지역 내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로컬푸드 확산

- 지역내 안전 농식품 공급 및 유통단계 축소 등을 위한 로컬 푸드 직매장 확대('14년 62개소 → '17년 120개소)

- 매장 확대와 함께 생산자조직화, 통합관리체계 및 다층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

- 로컬푸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 로컬푸드 조례제정 확산 추진('14 27개 시·군 → '17년 79개 시·군)

4-2. 농어업인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현장 요구가 높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6차 산업화 창업 촉진

(1) 6차산업화 창업지원 강화

□ 6차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시제품 생산 및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농업 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업인 등의 6차산업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추진

- 광역 지자체별 6차산업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분야별 창업교육, 소규모 창업장 조성 등 지원
- 임업분야는 지역별 임업진흥원을 통해 창업 컨설팅 지원

○ 시제품 생산, 제조·가공시설 공동이용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 설치 확대('15년까지 30개소)

- 지역별 종합가공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전수, 판로개척 등 6차산업 창업 종합적 지원
-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는 창조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기능을 다양화하여 활용도 제고

* 시·군 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업체 창업기술 지원

* 소규모 창업사업장 조성: '15년 204개소

○ 6차산업화 창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강화('15년 금리 2.0%, 300억원)

(2) 6차산업 사업화 및 활성화 지원 강화

□ 6차산업 사업자의 초기 및 보완 투자, 경영 컨설팅 지원

○ 경쟁력 있는 주체 육성을 위한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실시

- 우수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판로확보 등 분야별 집중 지원

* 사업자 인증(누계): ('15) 600 → ('17) 1,000 → ('19) 1,500

○ 6차 사업화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현장 코칭 지원 강화

-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 풀을 관리하고 농업인 등의 현장 요구를 파악하여 전문가 파견 지원

○ 경영체별로 6차산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확대

-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융복합형 농장 조성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해소('15:30개소)
- 중규모 이상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6차산업화 전문 펀드(100억원)를 통해 안정적 자금 지원

□ 6차산업 제품의 소비자 접촉 기회확대를 위한 유통판로 지원강화

○ 지역별 안테나숍을 통해 우수제품의 시장조사, 소비자 반응도 테스트 등 실시

○ 대형마트 등과 연계하여, 소비지 매장을 활용한 판매 지원 강화

4-3.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 지역 특색에 맞는 농어촌 관광상품 개발과 새로운 유망 관광 분야
육성으로 농어촌 관광의 질적 수준 제고

(1) 농어촌 관광 추진 체계 정비

□ 지역별 농어촌 관광 협업체계 구축

○ 시·군 등 지역단위로 다양한 농어촌 관광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활성화

* 예시: 양평군의 경우 ‘(사)양평농촌나드리’를 통해 군내 21개 농촌체험마을의
공동마케팅·공동홍보·서비스 교육 등을 수행,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단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서비스 교육,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농촌관광사업단 육성사업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확산

□ 농어촌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특화 관광모델 개발

○ 주민의 주체적·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사업 운영
으로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두레 육성

* 관광두레 육성: (‘15) 35개 → (‘17) 100

* 지역진단 및 지역특화 관광사업 모델 개발, 관광두레 프로듀서 교육 및
공동체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등 관광두레 브랜드가치 제고

(2) 농어촌관광 품질 제고와 사업 주체 역량 강화

□ 농어촌 체험마을 관광 서비스 개선 유도

○ 농어촌관광 등급 평가를 확대하여 자발적 서비스 개선 유도하고,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연계 상품개발 및 홍보 등 지원

* 농촌관광 등급평가 개소수: (‘15) 350개소 → (‘18) 전체 마을

* 어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 등급제 도입(‘15)

-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 및 마을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상품·음식 등 개발지원을 통해 관광 마케팅 활성화

* 농촌체험마을 예약서비스 지원 확대: ('14) 28개 → ('17) 60 → ('19) 80

* 바다여행 포털사이트 정보 표준화로 개별 마을 정보의 통합 검색을 지원

-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을 통해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농어촌 민박 및 관광농원 서비스 개선 강화

-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을 통해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

*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서비스·안전 기준 마련 및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추진('15년)

- 우수관광 농원 선정('14:20개소)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운영개선 지원

(3)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다변화

□ 농어촌 관광자원 맵 및 농어촌 자원연계 관광상품 개발 확대

- 관광자원 중 요구가 높은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앱 개발 추진, 방문객 후기 등을 통한 정보 교류 활성화

- 농어촌관광 자원에 대한 공동 조사, 소비자 테스트를 통해 관광 자원 연계상품 개발 확대(농식품부-KORAIL 협업, '14: 9종 → '17: 30종)

□ 산림 휴양·치유 공간 확대, 규제 개선을 통해 산지 관광 활성화

- 산림휴양·치유공간 등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숲속야영장 등 소비자 수요에 맞는 소규모 시설 활성화로 신규 소득원 개발

* 자연휴양림 조성: ('15) 162개소 → ('17) 180

* 치유의 숲 조성: ('15) 20개소 → ('17) 34

○ 산림 내에 독립적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산악 승마 등 산림 레포츠 관련 시설기준 마련

○ 기후특성과 지역 문화를 반영한 수목원, 산림박물관 조성·관리

□ 승마 인프라 확대와 수요 창출을 통한 말산업 육성

○ 승마장 및 체험 확대, 승마전문인력 양성 등 대중화 여건 조성

* 체험('13: 2만명 → '17: 3), 승마장('13: 15개소 → '17: 100), 승마전문인력('13: 1,800명 → '17: 5,330), 주말 학교프로그램('13: 37개교/750명 → '17: 100/2,000)

○ 학생 승마체험 확대 등으로 승마 대중화 여건 조성

* 토요일스포츠데이 프로그램 운영 등 종장기 수요 창출

* 승마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대회('13년 23대회) 확대

□ 기타 농촌관광자원화 확대

○ 전통주, 향토음식 등과 연계한 향토음식 투어 상품화 추진

* 음식관광 체험식당(누적) : ('14) 88개소 → ('17) 112, 찾아가는 양조장 ('14: 10개소 → '17: 30),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 확대('14: 10개소 → '17: 20)

** 전통시장 콘텐츠와 막걸리를 결합한 홍보 및 전통주 갤러리 조성 등

○ 슬로시티가 추구하는 가치(슬로라이프, 슬로푸드)에 적합한 한국형 관광모델 개발, 육성

* 마을별 향토역사자원, 슬로푸드, 자연식생 조사 및 보존 등 슬로시티 기초 콘텐츠 자원 마련,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촌 교육농장 품질관리 강화 및 치유농장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농촌 체험학습에 참여토록 유도

* 농촌교육농장: ('14) 477농장 → ('16) 525 → ('17) 680

* 치유농장: ('17) 9농장 → ('19) 27

○ 농촌테마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완, 지역별 관광거점으로 활용

4-4. 농어촌 일자리 지원

◇ 원활한 인력 수급과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1)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추진

- 도-농협력 일자리연계(지자체), 인력중개센터(농협), 워크넷(고용부) 전산망 연계를 통해 구직자풀 확대 및 일자리 매칭 촉진
 - 농협 시·군 농정지원단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 구인·구직자 DB를 구축하고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일자리 연계 실시
 - 지자체의 지역별 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비, 교육비 등 지원
- *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지자체, 누적) : ('14) 13천건 → ('19) 100천건

□ 외국인 근로자 배정시기 조정, 근무처 추가 등 운영 효율성 제고

- 영농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기를 조정(1월 배정자 확대)하고 근무처 추가제도* 활성화('19년 200농가 활용)
 - 근무처 추가기간 연장(2~4개월→2~6개월), 농협을 통한 알선기능 강화, 허용범위 확대(작물재배업→계절 특성이 강한 작물) 등 추진
- * 근로자가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기간 만료시 원사업장으로 복귀토록 하여 계절적 고용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 및 처우 개선

-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적정배치하고 근무경력 고려, 기능수준평가 강화 등으로 양질의 인력 확보
- 고용주 교육 강화, 점수제 개편,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근로계약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
- *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근로 시간 283.7시간, 휴일 21일/월(국가인권위원회)

(2)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고용 여건 개선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확대

- 시·군이 고용단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취업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지원

* 예시 : (양구군) 농어촌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자격 지원, (괴산군) 유기농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한 농촌지역 새일센터('14년 9개소) 확대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교육 등 취업·창업 종합 지원

* 농어촌 지역 여성 대상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신규 근로자 유입을 위한 농어촌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실시

-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기숙사, 통근버스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융자

* 사업주 투자금액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 융자(연1%)

(3) 농어촌 지역공동체 및 마을단위 사업 활성화

□ 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경영체를 육성·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제고

- 경관·환경개선 활동, 체험·관광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영세·고령농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마을 단위 공동경영체 육성: ('12) 2,600 개소 → ('17) 4,000

- 들녘내 다수의 농가들의 공동 농작업 조직 구성을 통해 공동육묘·방제 등 공동작업을 통한 규모화 영농을 수행

* 들녘경영체 육성: ('14)158 개소 → ('17) 300

5 문화·여가여건 향상

목 표

다양한 문화·여가 향유 및 활동참여 여건 조성

주요 과제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확대 ▶ 문화·여가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 ▶ 문화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기반 확충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향토문화 자원 복원·전승 ▶ 전통·향토문화 자원 활용 확대

성과 지표

성 과 목 표	2014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인프라 및 인적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시·군 생활문화센터 조성(개소) -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 누계(개소) 	<p>16</p> <p>2</p>	<p>138</p> <p>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별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실시율(%) -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실시 시·군 비율(%) 	<p>(‘13) 34.7</p> <p>(‘13) 31.2</p>	<p>50</p> <p>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 	<p>(‘13) 1.9</p>	<p>4</p>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도농간 문화향유 기회 및 품질에 격차 발생

○ 문화인프라 부족, 교통 불편 등으로 문화 접근성 취약

* 면적당 문화기반시설 수(개/km²) : 농어촌 0.01, 도시 0.13('1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정주민족도, KFD)

* 연간 예술행사 관람횟수/관람률 : 읍면 3.7회/52.7%, 대도시 5.1/72.5('12, 문화향수실태조사)

○ 기초자치단체(229개) 중 극장 부재 지역이 98곳에 달하고, 1인당 영화 관람 횟수*의 지역 편차도 심각한 수준

* 서울 6.01회, 전남 2.06회, 경북 2.39회, 충남 2.94회('13년 기준)

○ 노령자에게 적합한 체육시설 부족 등 생활체육 공간 및 여건 열악

□ 문화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및 공급자중심 정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참여형 지원정책 부족

○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자발적·능동적 참여 프로그램 부족

○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욕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은 부족

○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반 제공 필요

□ 지역 문화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적 공간 조성 필요

○ 지역 고유의 문화·인력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특화사업 개발 필요

□ 지역 단위 문화인력 부족으로 문화수요 발굴·기획 곤란

- 중앙정부의 하향식 문화정책 및 공급 중심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문화 정책의 차별성과 자생적 문화역량 부족
- 서울과 수도권에 문화예술인력이 집중, 지역 문화인력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횟수·콘텐츠가 제한적

- 문화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 및 정보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필요
 - * 관람률 : 소득(100만원 미만) 26.9%, 군지역 52.7%, 연령(60세이상) 30.4%
 - * 월평균 100만원 미만 가구 관람회수 : 1.6회(3.06배 차이)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부족, 부처간 사업연계 필요
 - * (예) 방과후 학교지원(교육부)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문체부) 등

◆ 현장 모니터링단 의견조사 결과 :

지역민 참여 및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27.4%, 면·마을단위 작은 문화공간 지원 24.2%,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19.4%, 문화시설 교통편의 지원 8.1%

“실질적인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참여 문화프로그램 확대”

“모든 문화시설이 거의 읍에 있기 때문에, 면지역에서는 누리고자 하는 시도도 못하고 있음”, “노령자에게 적합한 문화·여가 공간 필요”

나 추진 과제

5-1.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 구축

◇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문화 전문 인력 양성으로 농어촌 문화·여가역량 증대

(1)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확대

□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 확대

- 유휴 공간을 활용한 건립과 기존 타용도 공공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전국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19년까지 총 310개관 확대 건립

* 농어촌 공공도서관 개관 : ('15) 294 → ('16) 298 → ('17) 302 → ('18) 306 → ('19) 310

- 마을공동시설 및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독서사랑방, 문화체험, 도서관서비스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 확충

* 농어촌 작은도서관 개관 : ('15) 10개소 → ('16) 8 → ('17) 8 → ('18) 8

□ 극장이 없는 시·군에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 문예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극장이 없는 시·군에 100석 내외의 소규모 상설 상영관 건립 및 운영 지원('14년: 22개소)

* 농어촌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 ('15) 9 → ('16) 20 → ('17) 25 → ('18) 29

□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

- (지방체육시설 지원) 운동장, 체육관, 기존 시설 리모델링, 전지훈련시설 등 각종 경기대회 개최 기반 및 생활체육 활동 공간 마련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학교 및 지자체 부지에 다양한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등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높은 접근성 부여

□ 지역문화지수 조사를 통한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체계화

-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 지역의 재정자립도, 문화인프라, 문화향유 수준 등의 지표를 지수화하여 지역별 문화여건 비교·분석('12년 개발, '13년 지자체별 조사·발표)
* 2~3년 단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2) 농어촌 문화·여가 전문 인력 양성

□ 지역특성을 이해하고 지역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평가 할 수 있는 지역문화인력(활동가) 확충 및 교육 확대

- 대학이나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대상,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 '15년도 권역별(4개) 1개소 → '19년까지 광역별(16개) 1개소로 확대 예정
- 지역 문화재단 및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민·관·학(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문화 관련 종합컨설팅 지원
- 권역별(경기, 충청, 경상, 전라) 지역주민, 마을리더, 귀농·귀촌 희망자 등 대상으로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등 문화 활동가 양성 교육
* 연간 200여명 문화 활동가 양성 교육 및 18개 기획사업 지원

□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지원' 등 농어촌 지역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정규교과 및 돌봄교실·자유학기제(교육부)와 연계,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 확대를 확대하고 도서벽지 출강시 별도 수당 지급 등 우대
- 문화소외지역 학교의 전교생에게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꽃씨앗학교 선정 시 농어촌 지역 우대
* ('14) 예술꽃씨앗학교 43개교 → ('19) 60개교

5-2.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제고

□ 문화소외지역 생활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 기존 문화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동아리방, 다목적홀, 체육공간 등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 조성('19년까지 138개소)

* 거점형은 1,000㎡ 내외(시군구 설치), 생활권형은 200㎡ 내외(읍면동)로 조성

□ 공공 문화시설의 생활문화 기능 강화

-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권 기반 공공 문화 시설의 생활문화 활동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농어촌지역 작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학교 등의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 농촌 작은 문화교실 지원사업: ('14) 80개소, 5억원 → ('15) 100개소, 10억원

□ 주민 주도의 자생적 생활문화 활동 및 공간조성 지원

-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에 주민악단, 공공미술, 공동체 연극·영화 등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지역별 예술단체 당 10~60백만 원, 최대 3년 지원

*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공동체 '19년까지 150개소

-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 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 선정, 1개 마을당 연간 0.8억 원 내외 3년간 지원

* 문화마을 : ('14) 2개소 → ('15) 13개소 → ('19) 50개소

- 주민 주도 커뮤니티 공간의 생활문화 공간화를 위해 리모델링 지원

5-3.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 소외지역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향유기회 확대

□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문화·여행·스포츠관광) 기회 제공

* 저소득층 대상, 개인별 5만원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 농어촌에서도 불편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문화·여행·스포츠 프로그램 발굴 강화

□ 소외지역의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가 있는 날'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공동이용시설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의 실질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의 우수프로그램 순회 활동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확대
 - * 농어촌지역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도서관(연 100개관), 박물관(연 33회), 미술관(연 15회)

□ 농어촌 어르신 참여 문화프로그램 확대

- 농어촌 노인의 문화교육, 문화봉사, 일자리 창출 연계
 - * (1단계) 어르신 문화학교 → (2단계) 문화나눔 봉사단 → (3단계) 사회적기업화
- 음악, 연극, 만담 등 지역별 실버 단체들이 참여하는 실버문화대축제(지역별 및 연합) 개최 등을 통해 어르신 문화 참여 촉진

5-4.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 농어촌 전통·향토문화자원 발굴·보전·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미래가치 창출

□ 농어촌 전통지식자원의 발굴·전승

- 전통지식자원(민속어휘, 민간의료, 전통생활지식·기술 등)의 발굴 및 농어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전통지식자원 아카이브 구축
- 지역 이야기(신화, 전설, 민담 등) 소재의 예술 융합작품 공모 및 공연 지원 등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사업 육성

□ 전통놀이 등 문화자원의 복원·확산

- 지역별, 마을별 공동체 놀이 문화를 발굴·복원
-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 지원
- * ‘14년도 강릉단오제 등 9개 사업 지원(지특회계) → ‘15년도 14개 사업 지원

□ 지역축제의 문화·관광자원 활용

- 지역축제 지원으로 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매년 40개 내외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6 환경·경관

목 표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주요 과제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 활동 활성화
- ▶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보전 및 활용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 농어촌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 ▶ 하천, 해양 환경개선 지원
-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 ▶ 친환경농어업 확산으로 환경부하 저감
- ▶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 에너지 개발 지원
- ▶ 축산분뇨 자원화 및 관리체계 개선

성과 지표

성 과 목 표	2014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어메니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개소) -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개소) 	<p>4</p> <p>55</p>	<p>19</p> <p>7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누계, 개소) -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개소) 	<p>1,000</p> <p>-</p>	<p>(‘17) 3,950</p> <p>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개소) - 가축분뇨 자원화율(%) 	<p>1,143</p> <p>89.5</p>	<p>1,250</p> <p>9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펠릿 생산량(천톤/년) -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종) 	<p>89</p> <p>10</p>	<p>107</p> <p>15</p>

가 현황 및 문제점

- 경관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자율적인 경관보전 활동 한계
 - 경관보전직불제 등 경관작물의 식재를 통한 경관개선 효과는 있으나, 자율적·능동적 경관보전 활동 한계
-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비닐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환경 문제 상존
 -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 부족으로 폐비닐·폐농약병 등 수거율 저조
 - * 영농폐기물 미수거율('13) : 폐비닐 32만톤 중 23.3%, 폐농약병 6,180만개 중 30%
 - * 해양폐기물 미수거율('12) : 해양쓰레기 발생량 176천톤 중 27.5%
 -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다량의 부유쓰레기가 수질오염 등 초래
- 가축사육으로부터 배출된 분뇨에 의한 악취 문제 지속 발생
 -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있으나 관리 부실과 저장공간 부족 등에 따른 무단 투기, 살포로 악취 발생
 - * 축산분뇨 처리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13.8월, 환경부) 결과 전체 시설(95천 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 시설이 약 50%

◆ 현장 모니터링단 의견조사 결과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 확충 26.7%,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개선 20.9%, 축산분뇨처리지원개선 16.5%, 지열 등 대체에너지지원 14.6%,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7.8%

“영농폐기물처리가 문제임. 폐기물을 쌓아둘 장소도 문제이므로 농촌 폐기물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농촌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낮음.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뿐 아니라 현실적인 인센티브 도입 필요”

“축산분뇨의 악취가 문제임.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넘비시설로 설치가 쉽지 않음”

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농업유산, 경관작물 등 농어촌에 산재하는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 활동 활성화

□ 주민 자율적방식인 경관보전협약 체결 및 시행 활성화

-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보전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주민 경관보전협약 표준안 마련
- 시·군 및 마을단위 경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 개정('15년)

□ 마을 및 경관의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제도 확대

- 경관보전 직불제는 경관 개선효과가 특히 우수한 작물 위주로
재배를 유도하여 경관개선 효과 향상
* 면적(경관/준경관): ('12) 5,796ha/7,990 → ('15) 8,116/4,044 → ('19P) 10,000/1,000
- 조건불리지역의 마을자원 지속 보전·관리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직불 지원 확대
-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어가에 대해서 수산 조건
불리직불금 지급(가구당 50만원)

(2)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보존 및 활용

- 농어촌자원의 보존·관리 및 가치화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업유산 지정·관리 및 활용 지원
 -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 및 활용 근거 법제화, 지속적 발굴 관리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15년)
 -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속적인 발굴 및 체계적인 보존
 - *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 관리 : '19년까지 19개소(매년 2~3개소 지정)
 - 지역의 특수한 농어업·농어촌자원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조성 추진
 - 농어촌자원의 유지보전을 위한 농어촌경관 및 공간기술 개발
 - * 경관의 보존·형성·관리를 위한 통합적 기술 개발 연구
- 지역고유의 향토·특산식물을 현지 내외에 보존하고, 동시에 산림식물에 대한 연구·탐방·체험·학습공간으로 제공
 - 지역 향토·자생식물 등의 체계적인 보존과 산림식물에 대한 체험·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추진
 - 산림생태계 안정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생태숲 조성
- 농어촌 생태우수자원을 보존·활용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우수 생태자원 보유지역의 인근 마을을 생태관광지역,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하여 주민주도 생태관광 지원
 - * 생태관광지역('14년 17개소), 명품마을('14 13개소)를 지정해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전문가 컨설팅, 홍보지원, 인프라 확충 등 체계적 육성
 - 생태탐방연수원, 에코촌(생태관광지역 숙박시설), 생태탐방로 등 체류형 생태관광을 위한 인프라 확충

6-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영농폐기물, 부유쓰레기 등 농어촌의 환경오염 요인 최소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 농어촌 폐기물관리체계 개선

□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수거시설 설치

○ 도서, 산간 등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 ('15) 9개소 → ('19년) 11

○ 분리배출 취약지역 등에 거점 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2차적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맞춤형 자원순환 체계 지원

* 성주군에서는 마을단위 쓰레기 배출장소인 '클린하우스' 시범운영

□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 면 단위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으로 수거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점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체계화(반기별 1회)

* 공동집하장 설치 시범사업 추진('17년까지 3,950개소), 분석·평가를 통해 확대 검토

○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처리 비용 지속 지원

* '14년 현재 수거보상비(폐비닐 : 10원/kg, 폐농약용기 : 병 50원/개, 봉지 60원/개)

* 수거보상비 지원('15년~'19년) : 757억원(폐비닐 : 757, 폐농약용기 : 149)

(2) 하천 및 해양 환경개선 지원

□ 오염된 농어촌 마을도랑 살리기 지원

○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도랑 복원사업 및 주민 환경교육 실시

*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19년까지) : 실태조사(1,000개소), 복원(300)

□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효율적 정화체계 구축

○ 장마, 태풍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의 적기 수거 처리를 위해 상·하류 지자체간 처리비용 분담 등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

○ 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장마철 전후 집중 수거

*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량 : ('15년) 52천톤 → ('17) 54 → ('19) 56

□ 갯벌 복원으로 해양생태계의 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방치되고 있는 폐염전·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15년 8개소)

(3)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 농어촌 발생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 매립장 등 주민 기피시설을 에너지 공급시설과 연결시켜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 시범사업 추진(강원도 홍천)으로 성공모델 개발('14.10월~'16.9월), 종합계획 수립('14.12월) 및 전국 확산('15~)



6-3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부하 감소, 대체에너지 개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1) 친환경농어업 확산으로 환경부하 저감

□ 유기질비료 지속 공급,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확산

-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지원을 통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고품질 비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운영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친환경농업지구 확대 : ('15) 1,170개소 → ('17) 1,210 → ('19) 1,250

□ 해저쓰레기 수거, 친환경 어구 보급 등 어업 생산환경 조성

- 수중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여 어장환경 파괴 방지

* 연근해 자망·통발, 연안복합 등 허가받은 어업인 대상(연간 370척 규모)

- 해저쓰레기를 수거하여 선박운항 안전 및 어업 생산환경 개선

*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계획 : ('15) 3,704톤 → ('19) 4,305

- 안전한 수산물 공급할 수 있는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 '17년부터 시범사업(1개소)을 실시하고 사업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등 신개념 육상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 미생물이 사육수내 대사노폐물 등 오염물질(암모니아, 아질산 등)을 자연분해 정화시키거나 섭이 가능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등 유기합성물로 전환

* 1단계('15~'16) 기술확보, 2단계('16~'17) 경제성확보, 3단계('18~) 실용화

(2)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지원

□ 지열, 폐열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농업시설 확대

- 온실 등에 발전소 폐열,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으로 생산비용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도모

* 대체에너지시설 보급(누계) : ('15) 1,000ha → ('17) 1,200 → ('19) 1,400

- 지열·해수열 등의 열원을 이용한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 '18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210천kW 설치 지원

-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저압 접속용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활용 추진을 통해 축사 에너지비용 절감

*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축사지붕 등에 대한 태양광시설 설치비용 지원
(판매용 : 설치비의 90% 융자, 자가용 : Kw당 1,290천원 보조)

□ 목재펠릿 에너지의 국내생산 확대 및 수급체계 안정화

-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규모화 및 가동률 향상 지원

* 국내 생산량 확대 : ('15) 89천톤

- 새만금 등 유허지를 활용한 목재 에너지림 조성('15년 50ha)으로 안정적 원료공급 지원

□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스템 확립을 위한 기술 개발

- 농업부산물을 포함한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농산물 소재 개발 및 고효율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발굴 : ('15년) 10종 → ('17) 12 → ('19) 15

- 다시마, 모자반 등 비식용 해조류 대량 양식장 조성을 통한 바이오매스 원료의 대량생산체계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 1단계('09~'12) 기술확보, 2단계('13~'17) 경제성확보, 3단계('18~) 실용화

(3) 축산분뇨 자원화 및 관리체계 개선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개별농가 퇴액비화, 공동자원화 액비 저장조 및 부속도 판정기,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율 : ('13) 89.2% → ('14) 89.5 → ('17) 90 → ('19) 91

*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 수 : ('13) 98 / 8개소 → ('17) 150 / 21

-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수 : ('14) 6개소 → ('17) 10 → ('19) 13

□ 축산분뇨의 관리 지원 체계화

- 발생원별(축사·분뇨처리시설 등) 악취기준을 설정해 저감매뉴얼을 마련, 축산단지·민원다발 지역 컨설팅 등 지원

* 축산환경관리원 설립('15.3월)을 통해 가축분뇨 통합관리 기반 조성

- 축산환경 컨설턴트(300명)을 활용해 악취 관리를 지도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생산시설 설치 지원('15년 35개소)

- 사육환경의 자동 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축사를 도입하고, 최적화된 과학적 사양관리

* ICT 융복합 축사 : ('14) 30호(양돈·양계 전업농 0.6%) → ('17) 750 (16)

< 사례 : ICT 활용 양돈농장 축사(전북 장수) >



- ▶ 자동급이 관리 등 지능형 사양관리 시스템 운영
- 사육단계별 생육정보 분석을 통한 생산 및 경영관리
- 개체별 사료 급이·음수관리 등 사양관리
- CCTV·화재센서 등을 활용한 환경제어 및 위험관리

➔ 과학적 사양관리로 생산성(모돈당 출하두수, MSY) 17%, 출하품질 13% 향상

* 생산성(MSY) / 품질(AB등급 출현률) : (도입 전) 15두 / 72% → (도입 후) 18 / 85

7 안전 강화

목 표

자연재해 및 범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농어촌 조성

주요 과제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 자연재해 취약 시설의 보수보강
- ▶ 선제적인 산불 예방 체계 강화
- ▶ 긴급 재난·재해정보 전달체계 강화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 조성

- ▶ 업무상재해 예방 관리 강화
- ▶ 농업인 재해안전 관련 제도의 정착
- ▶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농어촌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 생활안전 통합관리 체계 구축 지원
- ▶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활동 강화
- ▶ 주민주도의 사고 예방 활동 지원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

- ▶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어촌 도로 개선
- ▶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활동 강화

성과 지표

성 과 목 표	2014	2019
■ 자연재해 및 안전영농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시설 보수·보강(누계 %) -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율(누계 %) 	47 56	62 66
■ 농어업 작업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 어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60 40	70 50
■ 생활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 	30	50
■ 보행·교통 안전(사고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기계 사고 발생건수 - 1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명) 	1,100 0.6	900 0.5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은 태풍, 홍수,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노출위험이 크지만, 행정구역의 광역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는 애로
 - 3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이 전체의 58%를 차지하는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큰 상황
- 영농·영어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체계 및 제도적 기반 미흡
 - 농업인 안전보험 및 수산인 안전공제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한계
 - * 재해율('12, 고용노동부) : 농림어업 1.41(6.02%↑) > 전체산업 0.59%
 - * 농작업사고로 인한 손상재해율이 3.0%, 이 중 전도로 인한 재해율이 38%
- 농어촌의 공간적 특성상 치안·안전 인프라 매우 취약
 - 범죄·사고·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장거리 이동이 불가 피해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려운 상황
 - * 화재신고시 5분내 소방차 도착율 : ('11) 51.4% → ('12) 52.3% → ('13) 42.8%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농기계·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 큼
 - 농어촌은 도로여건·안전시설 등 차이로 도시에 비해 교통사고에 취약
 - *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13): 대도시 및 일반시 592명/ 도농복합시 736명/ 군 81.6명
 - 농기계 등록대수는 감소 추세이나,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 * 농업기계 교통사고(경찰청): ('10년) 1,174건 → ('11) 1,109 → ('12) 1,079 → ('13) 1,141

◆ 현장 모니터링단 의견조사 결과 :

CCTV 설치 및 정비 42.8%,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확충 18.2%, 안전의식 및 교육 지원 8.2%, 위험지역 관리 및 재해방지지설 확충 7.5%, 산불예방인력·시설지원 7.5%

“취약지마다 CCTV설치가 필수적이며 운영과 감시 인력이 필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보, 부착물, 개인도구 등 개선 필요”

“농기계는 고가의 대형장비인데 반해, 농로가 너무 좁아서 잦은 전복사고가 발생”

7-1.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해 피해 최소화

(1) 자연재해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영농기반 구축

○ 저수지, 배수장 등 노후된 농업기반 수리시설(70천개소) 정비

* 기후변화대응 재해대비 중장기 계획('13~'30)에 따라 노후화된 수리시설 (3,402개소) 정비, 수로(14.9천km) 구조물화 추진

* 수리시설개보수율 : ('15) 49.8% → ('17) 55.5% → ('19) 61.9%

□ 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친수형 소하천 정비 및 어항시설 보강

○ 미정비 상태로 방치되어 재해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소하천을 정비 하여 재해에 강한 친수환경 조성

* 최근 10년간 ('04~'13년)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피해액의 47.3%가 소하천에서 발생

* 소하천 정비율 : ('15) 46% → ('17) 47% → ('19) 49%

○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한 노후 어항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어선의 안전한 피항을 위해 어항시설 보강(가거도항 등 59개항)

□ 배수장, 배수로 등 설치를 통해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조기 해소

○ 강우량 증가, 재배작물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배수개선 대상 면적 확대(232천ha→303천ha)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 설치

* 배수개선율 : ('15) 56.6%(170천ha) → ('17) 59.8%(180) → ('19) 63.1%(194)

(2)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체계 강화

□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등 산림재해 예측 고도화

- 평지와 차이가 큰(풍속은 3배, 최대강수량은 2배 차이) 산악기상의 관측 정교화를 위해 산악기상망 구축('15년 120개소)
- 실시간 기후자료 수신체계 구축, 기상정보시스템 개발로 모니터링 강화

□ 산불 상황관제 일원화, 진화기반 확충을 통해 초동대응 강화

- 산불 관련 빅데이터를 연계, 상황관제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산불신고, 상황전파, 진화까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능 고도화
- 전국 산불현장에 30분 이내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헬기 격납고 신설
* 사업량(격납고신설) : (~'14) 11개소 → ('16) 12개소, 30분 이내 출동 체계

□ 산불방지, 재해취약지 관리 등 산림보호에 주민 참여 확대

- 산불·병해충 예방, 산림정화, 재해취약지 관리, 불법행위 감시 등 산림보호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 요원 확충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불법소각 근절
* 소각으로 인한 산불 : ('12)31건, 15.7% → ('13)118건, 39.8% → ('14.6) 153건, 35.1%

□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

- 산사태 등 재해우려지역에 위험정보(주의보, 경보)의 신속한 제공 및 대피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피해 최소화
* 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 : (~'14) 24,201 → ('15 추가) 3,500 → (~'19) 36,000개소
* 산사태 위험정보(주의보, 경보)를 문자, 자막방송(KBS 등), SNS, 유선, 마을방송,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7-2. 안전한 영농·영어활동 기반 조성

◇ 자연재해, 농어업 작업상 재해에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 및 피해 보장 강화

(1) 농어업인 재해안전 관련 제도 정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업인 재해 안전보장제 강화

○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상시 4인 이하 농작업장 근로자」를 가입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보험대상 가입자 범위 확대

○ 「간병·직업재활급여」를 급여항목에 추가하는 등 보장급여 및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상향

*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14.12)

* 안전보험 사망시 보장금액 : ('14) 10천만원 (산재보험 12) → ('15) 11

○ 안전재해와 농작업과의 관련성 인정 기준, 예방·보장사항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안전재해 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원

* 농업인안전재해 관련 제도의 통합연계, 농작업관련성 인정기준 개발 등

□ 어업인의 영어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여 생활안정 도모

○ 수산인안전공제 보장수준 확대 및 홍보활동 강화로 가입률 제고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률 : ('15) 40% → ('19) 50%

○ 소형 영세어선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당연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하여 어선원보호 강화 및 어업경영안정 도모

* ('14) 확대방안 마련 → ('15) 시행령 개정 → ('16년) 4톤이상으로 확대

(2)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실질적 피해보장이 가능하도록 대상품목 확대 및 손해평가 선진화

- 보험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과수품목에 대해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기존 태풍, 우박 등 특정재해에 한정)하는 등 보장범위 확대

* 대상품목(농업/어업) : ('15) 62 / 21개 품목 → ('16) 65 / 24 → ('19) 69 / 27

* 종합위험방식 전환 : ('15) 사과 → ('16) 뽕은감 → ('17) 감귤

- 신속·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15.6)

- 품목·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상품연구 강화, 재해통계 구축 등 재해보험 기반 확충을 위해 전담기관 운영('15~)

(3)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

□ 농어업 작업과 관련한 다양한 안전기술 확산과 의식제고를 위해 교육·정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 주요 손상발생 형태 : 전도 38%, 추락 20, 농기계관련 사고 12 ('13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농진청)

- 안전의식 확산과 행동변화를 위한 농어업 작업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으로 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및 기술보급 확대

*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사업 : ('15) 85개소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14까지) 1,022개소 → ('15) 160개소

***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율(%) : ('15) 39% → ('17) 42 → ('19) 45

7-3.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인프라 확충 및 일상적 예방·교육 활동 강화

(1) 생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원

□ CCTV 설치확대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 마을정비 사업 등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소리·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건·사고를 스스로 인식하는 지능형 CCTV 보급 확대

* 마을내 CCTV 설치율 : ('13) 30 → ('19) 90

- 지역 내 CCTV를 통합 관제하여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필요한 상황조치를 합동 대응하는 시·군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 '14년까지 148개 구축 지원, '17년까지 모든 시·군으로 확산

□ 농어촌 생활안전지도 구축

- 시·군별 생활안전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도로 제작하여 인터넷, 모바일 창구를 통해 '15년부터 전국 제공

* 생활안전지도 구축 : ('15) 4대분야 및 추가 2대분야(시설·사고안전) 229개 시·군 → ('16) 추가 2대분야(산업·보건식품안전) 229개 → ('17) 추가 신규분야 229개

< 생활안전지도 정보 >

분야	구축정보	분야	구축정보
치안 안전	-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등 범죄발생 정보	교통 안전	-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지점 정보
재난 안전	- 침수, 산불, 산사태, 지진, 화재 등 재난발생 정보 및 대피소 정보	맞춤 안전	- 범죄·교통·재난 등 분야별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어린이·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별 맞춤형 안전지도 제공

(2) 주민 참여형 안전인프라 정비 및 예방활동 지원

□ 마을주민이 안전위해요인을 분석·정비하는 안전마을 조성 지원

- 주민들이 마을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위해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교육·컨설팅 및 부족한 안전인프라 구축에 행·재정적 지원


* 2014년 시범사업 10개소 선정·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

(3)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강화

□ 방법진단 및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치안 안전도 제고

-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방법진단을 실시, 순찰선에 편입하여 취약 장소·시간대별 맞춤형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점 보완 독려
- 농산물 수확기 등 지역의 치안수요를 분석, 특별 단속기간 지정·운영 등 단속활동 전개로 수확물 강·절도 예방

* 강원경찰청 '수확철 농산물 단속 특별기간', 상주경찰서 예약 순찰제 운영

< 전남청, 농수산물 현황도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대·파출소별로 주요 농수산물 재배지, 저장창고 등을 표시한 농수산물 현황도를 제작하고, 해당 지점을 중점으로 집중연계 순찰 실시 <p>(‘14. 9 기준, 전남 관내 115개 지역에 대한 지도 작성·비치)</p>

-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홍보, ‘안전의식 및 관심도’ 제고

* 경로당·마을회관 등 중심 범죄예방교실 운영, 지역맞춤형·생활정보제공형 홍보 추진

□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 빈곤아동 밀집지역 등 성범죄 고위험 노출 지역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추진

- 도별로 버스를 활용한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배치

* 이동형 센터 : (‘15) 10개소→(‘16) 12개소→(‘17) 14개소→(‘18) 16개소→(‘19) 17개소

7-4.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

◇ 누구나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도로여건·안전시설 등 취약한 농어촌지역 보행·교통 환경을 개선

(1)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어촌 도로 개선

□ 위험한 농어촌 도로 개선을 통해 도로안전·기능성 향상

○ 굴곡, 급경사, 노폭 협소 구간 등 농어촌 도로의 위험구간을 개선하고 안전펜스 등 시설물 보강 지원

* 농어촌 도로 정비 개소수 : ('15) 17건 → ('16) 20건 → ('17) 26건 → ('18) 24건 → ('19) 21건

○ 농기계 대형화 등 감안, '농어촌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

(2)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 보행안전 시설 정비,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교통안전 관리 강화

○ 보·차도 분리시설,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보행·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강화하고 지방비 매칭율 차등화 검토

○ 제한속도 30km/h 이하인 마을 진입로 등 생활도로 구간 확대

-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 군지역 노인보호구역 지정 수 : ('14) 89개소

□ 농기계·어선 안전장비 보급, 교육 확대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 안전반사판, 야광조끼·지팡이 보급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 어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어업인을 위해 사고발생시 필요한 구명조끼, 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안전장비 지원

○ 마을별로 찾아가는 농기계·교통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체험학습용 농기계 시뮬레이터 개발·보급(트랙터 '15년, 경운기 '17년)

*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 ('15) 1,100건 → ('16) 1,050 → ('17) 1,000 → ('18) 950 → ('19) 900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 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전문가네트워크 강화로 농어촌 여건을 감안한 삶의 질 정책의 효과적·효율적 추진 도모

□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신설 등 위원회 개편

- (분과위) 교육·문화·복지·정주생활기반 분과위 신설('15년 법령개정)
 - 민간위원장·관계부처 국장·전문가로 구성, 분야별 정책토론 활성화
- (특별위) 시의성 있는 현안등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특별위 신설
 - * 실무위원장이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결정하고 위원회에 활동상황 보고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축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 '12.5~)을 '삶의질정책지원센터'로 확대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연구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15.3~)
 - 삶의 질 계획 평가, 서비스기준·영향평가 운용 등에 상시 협업
 - 삶의 질 관련 통합적 통계 구축을 통해 정책 모니터링, 평가기반 제공

□ 부처간 농어촌 삶의 질 협업 모델 발굴·확산

- (목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 프로그램을 장소 기반으로 복합·연계하여 운영 효율성과 체감도 제고
- (추진방안) 도서관, 복지회관 조성 등 융복합 시너지가 기대되는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부처합동 시범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시설물(사업부지, 회의실 등) 복합활용 촉진

* 통합활용을 통해 절감한 예산의 일부는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추진일정)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연구용역 추진, 삶의 질 향상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15년), 시범사업 추진('16~'18), 사업평가·확산('19~)

<예산 통합활용 사례: 금산 다락원>

- ◇ 금산군은 교육·문화·보건·복지 복합시설인 다락원 건립·운영
 - 7개 부처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 등 12개 사업을 통합 활용하여 문예회관,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문화원,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을 복합 조성하여 활용도 제고 및 운영비 절감
 - 사업기간 : '00년 ~ '06.4월
 - 규모 : 대지 70,176㎡, 연면적 25,719㎡
 - 사업비 : 419억원(국비·광특: 183억원, 도비: 127억원, 기타: 109억원)

□ 삶의 질 향상 정책 수립 및 개선 지원

- (정책설계 기준 마련) 지방비 매칭비율 차등화, 경비산정 기준 차등화 등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 주요 원칙 제시

*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도입·집행, 전달체계 구상시 낮은 인구밀도, 분산거주 등 농어촌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쟁점별 가이드라인 제시

- (영향평가 사전의무화) 현재 중앙부처와 시·도가 자율시행(연간 1건 이상)하는 자체평가에 대해 의무기준을 설정, 사전의무화 검토·추진

* 법령 제·개정시 의무화하고 있는 평가(현행 성별영향평가,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평가)에 농어촌영향평가 추가

* 일정규모 이상 예산사업(예시: 연간 100억원 → 30억원, 단계적 확대) 및 5년 이상의 중장기 대책 수립시 농어촌영향평가 의무화

2 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역량 강화

◇ 시·도, 시·군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단 설치·운영

- 관계 부서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 설치 등을 통해 계획 수립·집행에 분야간 연계와 지역 공간 통합적 접근 강화
- 시·군의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포괄보조사업계획 등과 연계, 지자체별 역점적 삶의 질 개선 과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
- * 지자체 삶의 질 향상 정책 발표대회를 통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 조직·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육성

- 지자체는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현장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민간의 정책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
- * (광역) 시·도 활성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전문가(총괄계획가) 매칭, 다양한 영역의 지자체 정책 기획·집행 과정을 지원
- * (기초) 지자체 정책과 현장을 매개하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읍·면 등 주민주도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개발을 지원하고, 민간참여기구 형성을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역량을 단계적 강화
-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4.2)

<지역공동체 계획 제도화: 영국 사례>

- ◇ 영국은 지역공동체 육성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계획 수립 프로그램인 근린생활권 계획(Neighbourhood Plan)을 제도화('12년)
- 주민위원회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 계획 수립
- 지원금 활용계획 및 주민 실천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고, 50% 이상 찬성시 계획 실행
- 정부는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조직을 통한 계획 과정 자문 등 지원

VI. 계획의 실행과 관리

VI. 계획의 실행과 관리

1 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각 부처) 및 지자체 5개년 계획(시·도) 수립·추진(시·군은 시·도 계획에 따라 계획 수립)
-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의 예산 연계 강화

1)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각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까지 위원회 사무국(농식품부)으로 제출
 - * 사무국에서는 매년말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
- 사무국에서는 각 부처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

□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 (평가체계) 정책 추진성과를 평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자체 평가하고, 민간전문가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분과위원회 심의
- (평가내용) 계획, 실행·관리, 성과·환류 단계별 공통지표 활용 평가
 - (평가대상) 연차별 삶의 질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
 - (평가단위) 정책과제별, 정책 분야별, 부처별 평가 추진
- (환류) 사업 개선의견 및 자원배분 방향 제시, 위원회 심의
 - * 평가결과 최하위 그룹은 예산의 10%를 감액토록 하는 등 자원투자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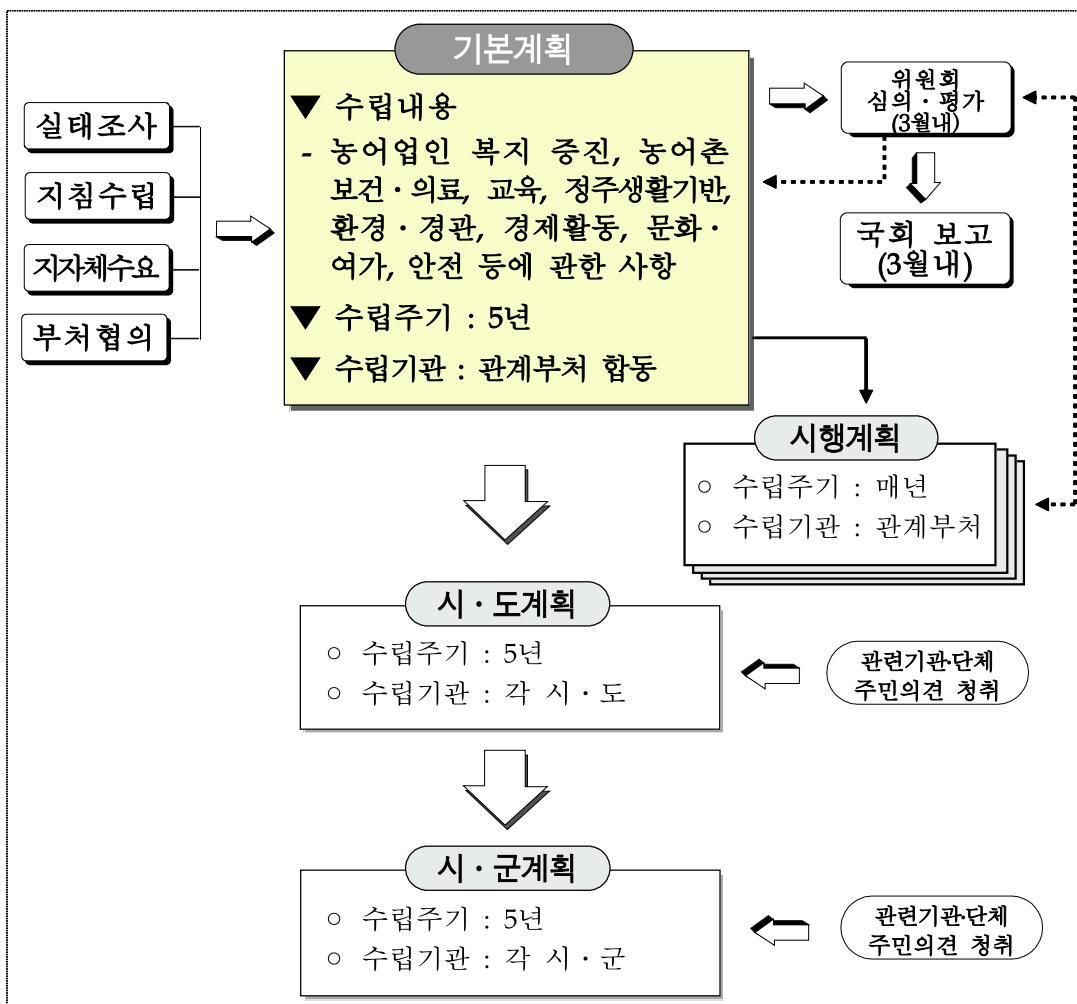
2) 시·도 및 시·군 계획의 수립과 평가

□ 시·도 및 시·군 계획의 수립

-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농식품부로 제출
- 시·군은 시·도 계획에 따라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로 제출, 시·도는 시·군 계획을 종합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자체점검 평가 실시단을 구성하여 점검

<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역할 >



3) 현장의 정책체감도 모니터링·평가

□ '삶의 질 정책 모니터링단' 설치·운영으로 현장소통 강화

- 농어촌 지역주민, 시·도 및 시·군 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고 분야별·지역별 정책동향 간담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수시 수렴
- 개선 의견은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제도화

<위원회 및 정책 모니터링단 체계도>



□ 농어촌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활용, 주민생활 개선 정도를 매년 점검·평가

- 삶의 질 계획과 매칭하여, **7대 분야**(기존 9대 분야),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 정책수요 반영 확대
 - * 산간·도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표준조례 제정·보급('15)으로 지역별 서비스기준 확산
- 관련 사업 및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보완하여 **기준달성 직접 지원**
 - * **국가의 직접 지원사업이 없는 기준**(예시)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13년 30.0%)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

- (개념)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교육·의료·안전·문화 등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활용) 매년 138개 농어촌 시·군을 기본단위로 기준달성 정도를 파악·분석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자원배분 및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19년 기준치 (%)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 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80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 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2. 교육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0
	5)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3. 정주 생활 기반	6)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7)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8)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0
	9)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10)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4. 경제 활동·일자리	11)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5. 문화·여가	12)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50
6. 환경·경관	13)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7. 안전	14)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15)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16)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2 투융자 계획

□ 계획기간 중 총 투융자규모는 46조 5천억원 수준으로 2차 계획기간 실적(34조 5천억원) 대비 35% 증가

○ 국비 32조 1천억원(총 투융자규모의 69.1%), 지방비 12조원(25.7%), 기타 2조 4천억원(5.2%)으로 구성

○ 연평균 투자규모는 9조 3천억원으로 '14년 대비 약 1.3배

* 제2차 계획기간 대비 투융자계획이 증가한 사유는 안전부문이 삶의 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되었고, 부문별로 일부 사업들이 증액 또는 추가되었기 때문임.

□ 국비 32조 1천억원의 연평균 투자규모는 6조 4천억원 수준으로 '14년(4조 9천억원) 대비 약 1.3배

구 분		2014	제3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합 계		73,448	86,335	89,562	93,782	96,579	98,668	464,926
재원 별	국 비	49,332	59,258	61,683	64,621	66,734	68,695	320,991
	지방비	22,519	22,077	23,018	24,267	25,070	25,169	119,601
	기 타	1,597	5,000	4,861	4,894	4,775	4,804	24,334
분야 별	보건·복지	9,921	12,802	13,725	14,551	15,373	16,059	72,511
	교육	2,450	1,159	983	801	608	608	4,158
	정주생활기반	27,047	27,451	27,414	28,297	28,487	28,017	139,666
	일자리·경제활동	7,461	7,452	7,942	8,199	8,138	8,128	39,859
	문화·여가	1,529	3,257	3,437	3,675	3,827	3,607	17,803
	환경·경관	18,181	12,862	12,905	12,999	12,839	12,864	64,470
	안전	6,859	21,352	23,157	25,259	27,308	29,384	126,460

- 1) 연도별 투자규모는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연도 예산 편성 시 조정될 수 있음
- 2) 지방비는 국비 매칭자금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만 포함
- 3) '14년 투융자규모는 제2차 기본계획 분야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제2차 기본계획 상의 '14년 투융자 규모와 다름